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수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의론에 관한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윤리학과

김 나 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의론에 관한 연구

권 수 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윤리학과

김 나 래

인 준 서

김나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사회가 형성된 이래로 계속 존재해왔다. 어쩌면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정의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정의이론들을 통해 우리는 정의의 일면(一面)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들, 대표적으로 롤스나 왈쩌의 정의이론은 모두 분배 정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의 이론들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부정의(不正義)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은 현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정의의 의미를 찾고자 하며 ‘정의의 내용’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가 우리 사회의 부정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파악할 때, 정반대(正反對)의 모습으로 정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됨으로써 얻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양상들을 제대로 진단한다면 ‘부정의’가 각각의 삶의 차원, 즉 경제적 영역, 문화적 영역, 정치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요구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정의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도 통합적인 정의이론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에 대한 3차원적 접근’이다. 이러한 3차원적 접근을 통해 도출되는 새로운 정의이론은 경제적 영역의 분배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역의 인정과 정치적 영역의 대표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정의(正義)를 제시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의론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정의교육에서 제시되는 정의의 내용이 분배 정의이론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넘어서 ‘인정’과 ‘동등한 참여’까지도 모두 정의의 내용으로 고려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한다. 다시 말하면 정의나 정의이론이 단순하게 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적 접근을 통해 도출된 정의이론을 바탕으로 체계화 된 정의의 내용이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정의(正義)’로 표현되는 도덕적 성향은 인지, 정서, 행동의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면적인 현상이므로 정의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의론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의의 개념이 구체적인 틀을 갖추고 좀 더 포괄적이고도 체계화 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또한 그러한 정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의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이 의미 있게 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2
II. 정의이론의 현재와 한계	6
1. 정의(正義)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	6
1) 자유주의적 정의론	11
2) 공동체주의적 정의론	20
2. 기존의 정의이론의 한계	29
III. 통합적 정의이론의 내용과 특성 : 3차원적 접근	35
1. 재분배인가, 인정(認定)인가	35
1) 분배로서의 정의문제	35
2) 인정에 대한 요구	37
(1) 호네프의 인정이론	38
(2) 프레이저의 인정이론	43
2. 재분배와 인정을 넘어, 참여적 평등으로	47
1) 정치적 대표 불능의 해결을 통한 정의의 실현	47
2) 정의의 가장 일반적 의미 : 동등한 참여	50

3. 통합적 정의이론이 갖는 의의 : 한국사회에의 적용	55
IV.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	66
1. 현재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의 문제점	66
2.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의 개선 방향	70
V. 결론	80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 문제의 제기

정의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삶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정의의 문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있으며,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현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정의의 의미를 찾고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정의(正義)란 무엇일까. 지금까지 정의는 주로 국민 국가 단위에서 경제적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로 이해되어 왔다.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담론들 역시, 현재 야기되고 있는 가장 큰 부정의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 분배의 해결이야말로 정의의 실현이 아닐까 하는 입장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정의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롤스의 정의론 역시 분배 정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사회 정의에 대한 이론은 크게 자유주의 진영의 입장과 공동체주의 진영의 입장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다. 롤스와 왈쩌의 정의이론은 각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정의의 문제를 각각 다르게 인식하고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자유주의 진영의 입장과 공동체주의 진영의 입장이 모두 정의를 논의함에 있어 분배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¹⁾ 다시 말하면

1)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학자, 롤스는 사회정의의 원칙을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두 입장은 모두 부나 손실의 배분을 결정하는 정의로운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나 재분배의 문제를 정의의 핵심으로 보는 입장은 현대사회의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의담론으로는 분명히 한계를 지닌다.

이는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 간의 갈등, 다문화(다민족, 다종교)사회의 정착화, 지배적 사회질서에서 배제된 소수자의 권리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부정의를 개선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현재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기존의 분배정의라는 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정의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배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주자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적 정체성과 인정의 문제, 정치적 인 차원에서 동등하게 대표되지 못하는 문제 등의 새로운 부정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다차원적 진단을 통해 부정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정의를 극복한 정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정의 이론들과 같이 주로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그 중심 목표로 삼고 있는 획일적인 사회정의를 넘어서 더 폭넓은 사회정의를 고려할 수 있어야만 한다.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본 연구는 현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정의의 의미를 찾고자 하며 ‘정의의

원칙들의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존 롤스, 『정의론』, 황경식 옮김(서울: 이학사, 2003), p. 37. 또한 공동체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학자인 왈쩌의 경우 사회적 의미가 분배와 가지는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시 분배 정의를 본질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왈쩌에 따르면 인간사회는 분배공동체이며, 모든 사회갈등 역시 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한다고 본다. 마이클 왈쩌,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원섭 외 공역(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p. 29.

내용'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정의(正義)는 사회의 부정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제대로 파악할 때, 정반대(正反對)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다차원적 진단을 통해 부정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 시대의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의 내용을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프레이저가 제시한 다차원적인 정의론의 구상은 현재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복합적 사회갈등의 성격을 해명하고 그에 대응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부정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부정의가 각각의 삶의 차원, 즉 경제적 영역, 문화적 영역, 정치적 영역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게 됨을 지적하고, 부정의를 불평등한 분배, 무시, 대표 불능으로 파악한다. 그러한 부정의의 정반대(正反對)의 모습으로 정의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므로,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에 대한 담론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재분배(redistribution)'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의 '인정(recognition)'문제, 정치적 차원에서의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까지 고려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바로 '정의에 대한 3차원적 접근'을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의에 대한 3차원적 접근을 통해 도출되는 정의이론은 좀 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본 논문은 먼저 기존에 논의되어 온 대표적인 정의이론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유주의적 진영에서의 정의이론으로는 대표적으로 롤스의 이론을, 공동체주의적 진영에서의 정의이론으로는 왈쩌의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존의 정의 이론들은 과연 '정의(正義)'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소개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이 두 진영의 정의이론이 여전히 논쟁이 되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큰 관점에서 본다면,

양 이론 모두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문제를 논의하기에는 공통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이론으로, 통합적 접근을 통해 도출되는 정의이론의 내용과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3차원적인 접근으로 경제적 차원에서의 분배 정의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상호인정에 기초한 정의, 더 나아가 정치적 차원에서의 동등한 참여의 보장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정의의 구상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정의에 대한 논의는 분배 정의의 문제를 넘어서 ‘재분배인가, 인정인가’, 또 더 나아가서 ‘재분배와 인정을 넘어, 참여적 평등으로’까지 확장되어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정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고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접근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이 아닌 실제로도 요구되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더 나아가서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도덕과에서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이 가지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의의 내용으로 분배 정의이론만 한정되어 제시되고 있어, 이는 학생들이 정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의교육이 주로 인지적 접근을 통해 기존의 정의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의(正義)’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행위의 지침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법론적인 접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의교육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러한 논의에 이어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이러한 논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현 시대에 맞는 정의이론을 구상해 봄으로써 기존의 정의이론들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현실에 적합한 정의의 개념과 정의이론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의이론들이 가지는 이론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이를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도 통합적인 접근의 시도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기존의 1차원적인 접근이 아닌 3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의(正義)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의에 대한 새로운 구상은 그 논의가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에 적용될 때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에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모두가 정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폭넓은 정의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의론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더욱 풍부한 정의의 내용을 제공하며, 이를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에 적용함으로써 정의의 개념이나 정의이론에 대해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더욱 더 정의로운 삶에 한 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

II. 정의이론의 현재와 한계

1. 정의(正義)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

카렌 레마크는 우리가 ‘정의’의 개념을 장님이 되어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살펴볼 뿐이라고 비유한다. 즉 “장님들은 서로 다른 부분-발, 귀, 어금니-을 만져보고 나서 저마다 그 짐승이 마디가 있고, 역세다거나 얇고, 유연하다거나 매끄럽고, 단단하다는 등 자기가 느낀 대로 서로 다르게 말한다”²⁾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의(正義)를 정의할 유일한 방법이나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하나의 정의론 같은 것은 없을 것”³⁾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도 역시 완벽하게 정의된 하나의 정의론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여기에서 논의의 핵심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正義)를 파악할 수 있을까’이다. 이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많은 학자들의 정의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정의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코끼리 자체(정의(正義))는 장님 각자의 말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이 때때로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 각자의 묘사는 코끼리를 정의하는데 분명히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묘사들인 다양한 정의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먼저 우리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내리고 구분해 온 정의 개념들을 면밀히 살

2) 카렌 레마크, 이유선 옮김, 『정의에 대한 6가지 철학적 논쟁』 (서울: 간디서원, 2006), p. 24.

3) 앞의 책, p. 24.

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관심은 현대사회에서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과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사회가 형성된 이래로 계속 존재해왔다. 그렇지만 각각의 시대에 따라 어떠한 모습을 갖춘 사회를 정의롭다고 보고 있는지는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정의(正義)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각각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의론을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편에서 다루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듯이 정의(正義)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며, 옳은 태도로 행동하게 하며, 또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임을 논의의 기초로 삼는다. 넓은 의미에서 정의는 공동체의 행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공동체에서의 완전한 덕이며, 모든 덕 가운데 가장 큰 덕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정의의 덕을 완전하다고 보는 까닭은 그것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덕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덕 가운데 정의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⁴⁾ 더 나아가 그는 “법의 이념인 정의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평등’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마치 기하학적으로 선의 양끝에서의 중간에 중점이 정하여 지듯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는 중용(中庸)의 상태가 정의의 상태라고 보고 이에 따라 정의를 여러 덕목으로 하여금 중용을 유지시키는 최고의 표준적인 덕”⁵⁾으로 파악한다.

공리주의자인 벤담과 밀은 ‘효용(utility)이 모든 판단의 포괄적 기준’이 되는 사상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역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명제와 깊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떠한 행위이든 쾌락(행복)

4) 아리스토텔레스, 조대웅 편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돌출새김, 2008), p. 135-137 참조.

5) 박채용·정태일, “정치철학적 정의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7호 1권, 2001, pp. 97.

을 증진시키면 옳은 행위가 되고 고통(불행)을 증진시키면 옳지 않은 행위라고 본다. 이는 개인의 행위, 인간관계, 사회 전체의 조직, 인류 만민의 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정의(옳음)와 관련한 공리주의의 입장은 목적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음이면 옳음이고 나쁨이면 그름”⁶⁾ 즉, 좋음과 나쁨이 옳음과 그름을 좌우하게 된다. 이는 모든 행위의 옳고 그름(정의와 부정의)을 결과에 기인해서 판단하게 만든다.

이와는 다르게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효용이 아닌 개인 권리의 옹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의 입장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에게 있어 정의(正義)란 철저하게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국가를 인정하고,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 즉 소유권을 통해 사적 소유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즉 정의의 실현은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로운 정당한 교환에 간섭하지 않고, 교환에서 비롯된 개인의 이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강탈하지 않으면 된다. 이와 같이 노직의 입장에서 정의의 문제는 소유와 바로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⁷⁾

노직처럼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보고 목표를 ‘인간의 기본권 보장’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롤스의 자유적 평등주의 입장은 노직과는 많이 다르다. 롤스는 사회제도의 제 1덕목을 ‘정의(正義)’로 보았

6)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 효용을 증진하였다면 그것은 좋음이고, 그것이 좋음이기 때문에 A의 행위는 옳음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효용이 하락하였다면 그것은 나쁨이고, 나쁨이기 때문에 A의 행위는 그름이 되는 것이다. 김만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서울: 동명사, 2002), p. 81.

7) 다시 말하면 노직에게 있어 소유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직의 분배정의로서 소유권리론은 소유물의 최초취득, 소유물의 이전, 소유물에서의 부정의 교정이라는 세 가지 원리로 기술될 수 있다. 그는 소유권리론을 통해 역사적 입장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정의로운 소유의 발생과 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소유의 성립과정 자체가 분배의 내용이므로 노직은 정당하게 취득되고 이전된 소유물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철저하게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의 인정은 강제적인 재분배를 거부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자유로운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지향하게 하고 있다. 앞의 책, p. 132.

다. 그는 “어떤 이론이 아무리 앞뒤가 맞고 간단명료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이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⁸⁾고 주장한다.

이처럼 롤스는 사회제도라는 것이 효율성의 문제보다는 그 제도가 정당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회제도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회의 기본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즉 협동하는 개인들 사이에 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분배의 원칙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협동하는 사람들이 협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율할 원리를 만들고 이에 따라 사회제도와 틀을 형성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분배할 원리를 모든 사람이 합의하여 만들고 이에 따라 사회를 운영해나가는 것이 바로 공정한 것이다.¹⁰⁾

다음으로 이러한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¹¹⁾을 중심으로 공동체주의자

8) 존 롤스, 『정의론』, 황경식 옮김(서울: 이학사, 2003), p. 36.

9) 김만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서울: 동명사, 2002), p. 141.

10) 도출된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 1원칙은 ‘최대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각 개인은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 가능한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체계에 대해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2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하에서 모든 사람의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두 원칙을 축차적으로 구성하여 우선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래서 제1원칙은 제 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중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의 두 원칙을 사회제도를 평가하고 사회변동의 전체적인 방향을 지도해 줄 “영원의 상 아래”에서의 “아르키메데스적 점”으로 간주한다. 황격식·박정순 외 12인, 『롤스의 정의론과 그 이후』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9), p. 52.

11) 공동체주의의 비판의 핵심은 크게 다음 세 가지에 응축되어 있다. 첫째는 사회적·문화적 자아관이다. 두 번째는 문화적 상대성을 결여한 사회 운영원리의 보편성이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선관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 여부이다. 이 세 가지가 비판의 핵심이라는 것은 권리중심적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 간의 논쟁에 대한 탁월한 비판서인 멀홀(Stephen Mulhall)과 스유프트(Adam Swift) 공저의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 (Liberals and Communitarians, 1992)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들은 권리중심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의 핵심을 자신의 가치관과 분리된 인간관, 사회와 고립된 개인주의, 자유주의 원리의 보편주의, 개인의 선관에 대한 주관주의, 개인의 선관에 대한 국가중립 등으로 요약한다. 이 중 앞의 두 개는 사회적·문화적 자아관에 해당되고 세 번째가 문화적 상대성

들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왈쩌의 정의론을 통해서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고자 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왈쩌는 공동체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분배이론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평등한 분배정의’¹²⁾라 일컫는다. 그의 분배 정의론은 한마디로 ‘다원적 가치의 평등한 영역을 보장하는 것’¹³⁾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사회에는 정치는 정치에 맞게, 경제는 경제에 맞게, 혹은 교육에는 교육에 맞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고, 이 가치들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서만 역할을 다할 때 사회정의가 이루어진다”¹⁴⁾는 것이다.

또한 왈쩌는 인간사회를 수많은 가치를 분배하는 ‘분배공동체’로 본다. 인간들은 사회 안에서 가치들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며 교환한다. 사회 내에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수많은 가치들을 적절하게 배분하려고 한다면, 단일한 분배정의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왈쩌는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¹⁵⁾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왈쩌의 다원주의적 분배정의이다. 각각의 영역에 자율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자율성으로 인해 각 영역은 자신에게 합당한 사회적 가치들을 형성하게 되고, 형성된 가치들은 적절한 기준 하에서 분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항상 하나의 영역이 다른 하나의 영역을 견제하고 영역간의 구분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훌륭한 담장이

을 결여한 사회 운영원리의 보편성에 해당된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개인의 선관에 대한 국가의 가치판단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김만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서울: 동명사, 2002), p. 182.

12) 평등은 똑같은 양의 재산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은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배 기준을 요구한다. 마이클 왈쩌, 정원섭 외 공역, 『정의와 다원적 평등』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p. 53.

13) 앞의 책, p. 41.

14) 김만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서울: 동명사, 2002), p. 193.

15) 마이클 왈쩌, 정원섭 외 공역, 『정의와 다원적 평등』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p. 66.

좋은 사회를 만든다”¹⁶⁾는 왈쩌의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구분된다. 이렇듯 정의는 개념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수많은 이론적 여정을 통해 더욱 더 견고해진,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의(正義)’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정의의 개념에 대한 이해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정의이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진영의 정의론과 공동체주의적 진영의 정의론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유주의적 정의론 :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1) 이론적 개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행위란 전체적인 행복의 양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공리주의는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행복’을 내세우는 입장으로 행복의 양과 행위의 올바름이 비례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리주의의 이론에 따르면,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위해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전체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최대 다수의 행복만을 고려하는 공리주의적인 태도를 철저히 배격하며 롤스는, 정의의 원리는 최대다수의 행복에 대한 고려에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등장해야 한다

16) 어떠한 사회적 가치 x 도, x 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 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 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앞의 책, p. 57.

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롤스는 “개인을 존중하면서, 타인을 위해 개인의 복지나 권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이론, 그러면서도 배분적 정의에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해주는 이론을 구성”¹⁷⁾하고자 한다.

롤스는 『정의론』¹⁸⁾을 통해서 사회계약론의 전통 속에 함축된 대안적 정의관의 중요한 구조적 특성들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정의에 관한 보다 신중한 판단에 이르게 해주고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가장 적합한 도덕적 기초를 마련해준다. 롤스는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특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정의의 원칙의 필요성을 말한다.

사회란 비록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해관계의 일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특성도 갖는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혼자만의 노력에 의해서 살기보다는 사회 협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 산출될 보다 큰 이득의 분배 방식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적은 몫보다는 큰 몫을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17) 카렌 레바크, 이유선 옮김, 『정의에 대한 6가지 철학적 논쟁』 (서울: 간디서원, 2006), p. 73.

18) 롤스의 『정의론』의 성격을 요약하자면, 방법론적으로 추상적이고 내용면에서는 사회계약론적·자유주의적·평등주의적이다. 롤스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정의론』의 목적은 기존의 사회계약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사회계약의 핵심, 즉 ‘공평으로서의 정의’는 권리와 의무의 분배를 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분배를 규정하는 정의원칙은 자유롭고 합리적이면서 자신의 내적 상태 및 외적 상황의 특수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상황(원초적 상황)에서 도출하는 가상적 합의를 통해 채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의 제1원칙에서 개인은 ‘평등한 자유’를 가지며 이는 불가침의 것이라는 논의는 롤스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입장에 기초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정의의 제2원칙 중 ‘차등의 원칙’에서 불평등이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의는 그의 정의론이 가진 평등주의적 함의를 드러낸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이상으로서의 평등과 실제적 불평등의 간극을 해소하는 방식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평등한 자유와 차등의 원칙의 결합이며, 이는 현대적 시민권 개념에서 출발한 평등주의적 논의의 정교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봉석, "철학적 정의론의 다차원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8, pp. 279.

19) 존 롤스, 황경식 옮김,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p. 37.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준다.¹⁹⁾

즉 한 사회내의 개인들은 언제든지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원칙들이 사회 정의의 원칙이 된다. 이러한 롤스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정의의 원칙’을 확립해야하는 당위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도 역시 이러한 근거로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롤스는 정의와 부정의에 대한 어떤 합의의 기준이 없을 경우, 서로 이익이 되는 체제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그들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롤스의 말대로 불신과 원한이 시민적 유대를 좀먹으며, 의혹과 적개심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이때 정의관이 갖는 역할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적절한 배분의 몫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롤스는 정의의 일차적인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²⁰⁾고 말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질서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을 검토한다. 결국 롤스가 제시하는 정의론의 요지는 원초적 계약을 통해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합의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

20) 앞의 책, p. 40.

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 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이렇게 정의의 원칙들을 보는 방식을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고 부른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합의함에 있어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은 평등한 ‘원초적 입장’인데, 이는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이러한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나 문화적 원시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²¹⁾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원초적 입장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정의의 원칙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는 원칙이라는 것이며, 그러한 합의를 통해 도달된 정의관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으로부터 그 공정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원초적 입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들에 대해 좀 더 논의 할 것이다.

(2) 주요내용

롤스는 먼저 정의의 상황을 제시한다. 정의의 상황에는 ‘객관적인 정의의 상황’과 ‘주관적인 정의의 상황’이 있다. “객관적인 정의의 상황이란 일정한

21)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이러한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서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앞의 책, p. 46-47.

영토 안에 개인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 이들의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이 비슷한 것, 이들의 취약함, 자연 및 기타 자원의 희소성을 가리킨다. 주관적 정의의 상황이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로, 사람들은 비슷한 필요와 이해를 가진다는 것이고, 둘째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이다.”²²⁾

특히 롤스는 “객관적 정의의 상황 가운데서는 자원의 희소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주관적 정의의 상황 가운데서는 상호 무관심을 중시한다. 곧,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적절한 희소성이 있는 조건 하에서 사회적 이익을 나누어 갖기 위하여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정의의 상황은 발생”²³⁾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의 원칙들이 요구되는 정의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원칙들에 합의하게 되는가? 롤스는 이러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모두가 정의의 원칙에 합의하게 되는 최초의 상태에 대한 전제 조건을 규정한다. 그것이 바로 ‘원초적 입장’이다.

원초적 입장이란 “거기서 도달된 기본적 합의가 공정하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최초의 원상”²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데 있어 그 누구도 타고난 운수나 사회적 여건 때문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일반적으로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또한 정의의 원칙들이 한 개인의 특수한 처지에 맞추어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데에도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롤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 경우에는 부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칙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경우에는

22) 이상원, “존 롤즈의 정의론: 공정성으로서의 정의(I)”, 『신학지남』, 제66호 3권, 1999, pp. 212.

23) 앞의 글, pp. 212.

24) 존 롤즈, 『정의론』, 황경식 옮김(서울: 이학사, 2003), p. 52.

그에 반대되는 원칙을 제안할 가능성이 아주 짙을 것이다. 바람직한 제한 조건을 생각해보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런 종류의 지식을 갖지 않는 상황을 상정하게 된다. 우리는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편견에 의해 인도되게 하는 이러한 우연적 여건들에 관한 지식을 배제한다. 이리하여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된다.²⁵⁾

또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원칙의 선정 절차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누구나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 이성 따르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누구도 사회적·천부적 우연성에 의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 평등한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합리적인 개인이므로, 이러한 개인이면 누구나 정의의 원칙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은 거기에서 합의된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자연적 여건을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 있어야 하며, 여러 대안들이 그들의 특정한 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그들이 몰라야 하며 일반적인 고려 사항만을 기초로 해서 원칙들을 평가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로 차단되어야 할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각자는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지위나 계층을 모르며, 천부적 자산과 능력, 지능과 체력, 기타 등등을 어떻게 타고나는지 자신

25) 앞의 책, p. 54.

26) 앞의 책, p. 196.

의 운수를 모른다. 또한 누구든지 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합리적 인생 계획의 세목을 알지 못하며, 또는 심지어 모험을 몹시 싫어한다든가 비관적, 혹은 낙관적인 경향과 같은 자기 심리적인 특징까지도 모르고 있다. 또한 나는 당사자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특수 사정도 모른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이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룩해 온 문명이나 문화의 수준도 모르고 있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세대에 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²⁶⁾

그러한 정보들이 무지의 베일을 통해 모두에게 차단되지만, 무지의 베일이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차단되지 않은 정보들도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다.

그들이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은 알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들은 정치 현상이나 경제 이론의 원칙들을 이해하며 사회 조직의 기초와 인간 심리의 법칙들도 알고 있다. 또한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모든 일반적 사실들을 안다고 가정된다. 일반적인 정보, 즉 일반 법칙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데, 그것은 모든 정의관들이란 그것들이 규제할 사회적 협동 체제의 특성들에 부합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²⁷⁾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지의 베일은 모두가 언제나 동일한 원칙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관건이 되는 조건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무지의 베일은 이용될 수 있는 정보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언제나 동일하리라는 것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27) 앞의 책, p. 196.

그렇다면 이러한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개인들 모두가 동일하게 선택한 정의의 원칙들은 무엇일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한다. 채택되리라고 생각되는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 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 2원칙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²⁸⁾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반면에 두 번째 것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이 원칙들은 1차적으로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이러한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해 롤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 1원칙과 제 2원칙은 다른 부분에 적용되는 것인데,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

28) 앞의 책, p. 400.

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제 1원칙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자유들이 목록으로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²⁹⁾이다. 이러한 자유들은 제 1원칙에 의거해서 평등해야 한다고 롤스는 말한다. 여기에서 제 1원칙이 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는 종류의 규칙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은 모든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제 2원칙은 “우선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계통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조직들의 기획에 적용된다.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제 2원칙을 적용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 아래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게 된다.”³⁰⁾ 이러한 제 2원칙이 의도하는 것은 분배의 몫에 있어서 사회적 우연성이나 천부적 운명의 영향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롤스는 ‘정의(正義)’를 사회 제도의 제1덕목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정의는 정의의 원칙들로 구체화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29) 앞의 책, p. 106.

30) 앞의 책, p. 106.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준다. 이러한 정의의 원칙들의 준수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며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본다.

2) 공동체주의적 정의론 : 왈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1) 이론적 개관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오늘날 가장 체계적이고 정연한 자유주의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정의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적 계약의 당사자들과 같이 자유롭고 평등하면서도 모든 구체적 개별성을 결여한 합리적이고 추상적인(disembodied) 인간을 끌어들이는 이상, 개인들이 속한 사회적 맥락이 함축하는 형성적 의의(formative significance)를 무시하고 그들 간의 관계가 갖는 도덕적 의의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³¹⁾ 공동체주의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의론(특히 롤스의 입장)이 전제하는 ‘원초적 입장’이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 즉 자신의 목적이나 가치관으로부터 추상된 그림자 자아(shadow self)를 가정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특히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론을 전개한 롤스가 전제하고 있는 개인의 추상성(고립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의무론적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등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공동선의 실현이나 인간적 덕(virtue)을 더욱 중시한다. 즉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독립된 개인의 자아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개인의 정체성을 더 중시한다.

31) 황격식·박정순 외 12인,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9), p. 24-25.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요 쟁점은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제시하는 인간관과 정의론의 현실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비판을 하며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들로는 맥킨타이어(Alasdair McIntyre)³²⁾, 샌들(Michael Sandel)³³⁾, 왈쩌(Michael Walzer), 테일러(Chales Taylor)등이 있다.³⁴⁾ 공동체주의자들은 공통적으로 ‘정의(正義)’는 역사적이고 특정한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의 이해를 반영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정의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교차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견해를 비판한다.

이러한 공통적인 사상적 기반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주의자들의 정의관 역시 한 마디로 단언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각각의 학자들이 상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주의 정의관의 기본적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⁵⁾

맥킨타이어	전근대적인 완전주의적 정의 : 정의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마땅한 것을 주고, 어떠한 사람도
-------	--

32) 맥킨타이어(Alasdair McIntyre)는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인간, 즉 개인이 스스로 어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규범을 만들어가는 사고방식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예컨대, 인간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어느 도시의 시민이고 어느 직업의 구성원이고, ‘나의 존재’는 자신의 가족, 도시, 종족, 민족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맥킨타이어는 개인이 우연적 특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삶과 도덕적 출발점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규정된 상황 속에서 상호 결합에 의해 구성되고 개인에게 선이 되는 것이 공동체의 선택과도 연관된다는 것이다. 윤진숙,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의 다원적 정의론”, 『법학논총』, 제17집, 2007, pp. 5-6.

33) 샌들(Michael Sandel)은 타인과의 관계, 상호승인 속에서 개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롤스가 개인의 자아가 외부적 국가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정체성을 형성하고 국가가 이를 중립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상정한다면, 샌들은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규정되어 개인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그는 인간은 일정한 공동체에 의해 인격의 한 부분이 형성되는 ‘상황적 자아’ 개념을 제시하면서,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간은 공동체의 목표 속에 연루되지 않은 인간을 상정하는 것으로서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의 글, pp. 4-5.

34) 앞의 글, pp. 195.

35) 제시된 표는 박정순, “공동체주의 정의관의 본질과 그 한계”, 『철학』, 제61집, 1999, pp. 270-281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들의 응분과 양립되지 않는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하나의 경향이다.
샌델	교정적 덕목으로서의 정의 : 공동체주의 사회에서 정의는 그 사회가 실현하기를 갈망하는 최고의 덕목은 아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하나의 교정적 덕목에 불과하고, 그것의 가치는 교정해야 할 결함의 존재에 비례할 뿐이다.
왈저	평등주의적인 다원론적 정의 : 정의론의 목표는 복잡 평등 (complex equality)를 실현하는 것이다.
테일러	공화주의적인 총체론적 정의 : 정의는 통상적으로 동등한 몫(equal sharing)의 원칙과(우리가 시민으로서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완화된) 기여(contribution)의 원칙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이다.

이처럼 4명의 공동체주의자들의 정의관을 살펴보면, 이들의 입장 차이는 매우 광범위한 것처럼 보인다. “맥킨타이어는 ‘전 근대적인 완전주의적 정의관’을, 샌델은 ‘교정적 덕목으로서의 정의관’을, 왈저는 ‘평등주의적인 다원론적 정의관’을 테일러는 ‘공화주의적인 총체론적 정의관’을 각각 옹호”³⁶⁾한다. 또한 그들은 공동체의 공동선을 유지하고 분배하는 기준인 분배적 정의의 신조와 원칙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를 표출한다. “맥킨타이어는 응분을, 샌델은 도덕적 응분 혹은 공적을, 왈저는 마르크스의 신조를 변형한 능력과 필요를, 테일러는 동등한 몫과 기여를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정의가 역사적이고 특정한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의 이해를 반영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은 정의원칙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교차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견해를 비웃는다.”³⁷⁾

36) 앞의 글, pp. 282-283.

37) 앞의 글, pp. 283.

이러한 공동체주의자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유사성이 있는 이론들이지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라고 명명할 만큼 공통적인 정의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종합하여 하나의 이론을 도출해내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 그 대신 기존의 평등주의 대신 다원적 평등사회를 위한 복합적 평등론을 전개하여 정의의 영역에 따라 다른 세분화된 정의규준을 제시한 왈쩌의 정의론을 통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일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왈쩌는 롤스가 전제하고 있는 원자론적·개인주의적 인간관을 비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적 불평등에 대응한 단순한 분배정의를 대신할 복합적 평등론을 전개한다.

왈쩌는 정의에 대해서 보편적인 단일한 이론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원적 평등(complex equality)’이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평등주의자들은 먼저 인간의 삶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일련의 사회적 기본적 가치(혹은 재화)를 확인한 후, 이런 가치들을 모든 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하고자 하거나, 사회적 최소치를 보장하고자 한다. 왈쩌는 이런 평등을 단순 평등(simple equality)이라고 말한다. 특히 그는 롤스의 정의론을 대표적인 단순 평등 이론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런 단순 평등의 문제는 가치들 간의 전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돈을 정치권력과 교환하고자 한다든지, 정치권력으로 명예까지 확보하고자 한다. 왈쩌는 가치들 간의 이런 전환을 ‘전제’라고 하며, 자신의 다원적 평등의 개념을 통해 이를 저지하고자 한다.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공동체 안에는 그 나름의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가치의 고유한 의미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가치들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의미에 따라 그 고유한 영역을 갖게 된다. 이때 그 분배 기준은 사회적 가치의 특성에 따라 자유 교환, 분배 혹은 응분의 몫 등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다원적 평

등의 개념을 통해 왈쩌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적 가치들의 다원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분배 원칙의 다원성까지 확보하고자 하는 것”³⁸⁾이다. 그는 “분배적 정의에 관한 작업으로 사회적 재화의 의미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 특정한 국가적 문화 내에서 그 재화의 의미에 따라 재화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³⁹⁾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각각의 사회적 재화는 그것이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고유한 영역이 있는 바, 그 영역을 지배하는 합당한 원리에 따라 재화가 분배되는 한편, 한 영역에서의 분배 원리가 타 영역의 분배 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다른 사회적 재화들의 배분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서 정의의 다른 ‘영역’들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왈쩌는 『정의와 다원적 평등』이란 저서에서 “정의와 평등은 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그는 기존의 정의의 영역들을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안전과 복지, 돈과 상품, 공직, 노역, 여가, 교육, 가족과 사랑, 종교적 은총, 명성, 정치권력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영역에 따라 재화의 분배와 같은 정의의 기준들을 다르게 파악해야 함”⁴⁰⁾을 주장한다. “어떠한 가치도 다른 가치를 지배할 수 없는 복합평등의 체계에서 정의는 재화들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분배를 할 때 정당하게 하

38) 마이클 왈쩌, 정원섭 외 공역, 『정의와 다원적 평등』(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p. 30.

39) Brian Orend, “Walzer's General Theory of Justice”, 『Social Theory and Practice』, 27(2), 2001, pp. 207.

40) 복합적 평등은 11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논의되는데, 그 중에서 공동체구성원 자격은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내적 결정과 상호부조라는 외적 원칙에 의해서, 안전과 복지는 필요에 의해서, 돈과 상품은 자유교환에 의해서, 대부분의 공직은 자격과 공정성에 의해서, 힘든 노동은 평등이나 필요에 의해서, 자유시간은 자유선택이나 필요에 의해서, 기초교육은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평등하게, 전문교육은 개인의 재능을 참조하여 분배를 결정함으로써, 가족과 사랑은 이타주의에 의해서, 종교적 은총은 자유로이 선택한 믿음에 의해서, 명성은 자유교환이나 공적이나 자기존중에 의해서, 정치권력은 토론과 민주주의가 주된 분배원칙이라고 왈쩌는 주장한다. 윤진숙,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의 다원적 정의론”, 『법학논총』, 제17집, 2007, pp. 8, pp. 14-15.

되 재화들 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하는 과정에서 획득되는 것이다.”⁴¹⁾ 즉, 왈쯔는 각 재화의 내재적 원리에 따라 다른 분배원칙들을 적용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고 있으며, 분배영역에 내재하는 고유한 작동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주요내용

왈쯔는 하나의 단일한 분배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도 사회적 가치들의 다양성과는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적인 분배 원칙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법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지금까지 종종 분배적 정의로 논의되어 온 것들인데, 자유 교환, 응분의 몫, 필요라는 세 가지 기준이다.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느 것도 분배 영역 전체를 아우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 세 가지 기준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지 결코 그 전체의 모습은 아니라고 본다.

분명 자유 교환은 개방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분배적 결과도 보장하지 않는다. 만일 교환 과정에서 이후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확립될 사회적 가치들의 특정한 분배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시점의 어떤 교환 과정이건 그 과정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자유 교환을 화폐라는 자연적 매개를 통해 모든 가치들이 다른 가치들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한다. 지배적인 가치나 독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때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거래, 교역, 판매, 구매 등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동의된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모든 교환은 사회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은,

41) 앞의 글, pp. 8-9.

개인들이 가치들에 부가하는 의미들에 대해 끊임없이 민감하면서, 그 작동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다원주의적이다.

그러나 왈쩌가 보기에 시장에서의 일상적 삶, 즉 자유 교환의 실제 경험은 이론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매우 다르다고 판단된다.

흔히 중립적인 매개물이라고 생각하는 화폐가 실제로는 지배적 가치가 되고, 거래와 교역에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자들, 즉 손을 대는 것마다 돈으로 변화도록 만드는 부르주아지(the green thumb of the bourgeois society)들에 의해 독점된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화폐의 재분배와 단순 평등 체제의 확립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모종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⁴²⁾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⁴³⁾로 인해 왈쩌는 ‘자유 교환’이 일반적인 분배 기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자유교환이 작동하는 경계선들을 개별적인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화폐가 모든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자유 교환에서 이러한 경계선들이 반드시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자유 교환과 마찬가지로 “응분의 몫 역시 개방적이면서 다원주의적인 것”⁴⁴⁾으로 보인다. 우리는 모든 개인의 응분의 몫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 아주

42) 마이클 왈쩌, 정원섭 외 공역, 『정의와 다원적 평등』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p. 59-60.

43) 왈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로 정치 권력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우리는 정치 권력을 투표, 영향력, 공직 등의 중요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의 집합체로 이해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가치들이 모두 거래될 수 있으며, 일부 개인들은 다른 가치들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이런 가치들을 축적하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사 이런 희생이 실제로 자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일종의 전제다. 즉 단순 평등이라는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비열한 전제(petty tyranny)인 것이다. 나는 모자 없이도 살 용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모자와 당신의 투표권을 교환함으로써) 두 번 투표를 할 것이다. 반면 투표보다는 나의 모자를 더 높이 평가하는 당신은 (당신의 투표권과 나의 모자를 교환한 결과) 투표를 아예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발적인 합의에 이른 우리 두 사람과 관련해서만 본다면, 이러한 결과가 전제적인 성격을 지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러나 나에게 비대칭적인 권력을 허용해야만 하는 다른 모든 시민들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것은 분명 전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앞의 책, p. 60.

44) 앞의 책, p. 61.

민감할 것이며, 서로 다른 모든 집단이 각각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진행되는 방식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⁴⁵⁾ 응분의 몫은 분배에 있어 강력한 주장이지만 이는 난해한 판단을 요구한다. 또한 응분의 몫은 오직 아주 특수한 조건들 하에서만 특수한 분배를 산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다음으로 필요라는 기준은 ‘각자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구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공동체의 부를 그 성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분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가. 많은 가치들에 대해서 분배의 기준이 ‘필요’가 될 수 있을까. 왈쯔는 필요의 기준은 다양한 가치들을 분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특정한 분배 영역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가령 빈곤한 사회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부가 이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설사 매우 낮은 물질적 수준에 있는 사회에서조차도 필요와 더불어 항상 다른 분배 기준들이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필요라는 기준이 해당 영역에서는 가치 분배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분배 기준들이 작동하는 영역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해보면, 왈쯔는 분배의 원칙으로 단일한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분배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자유교환(free exchange)’, ‘응분의 몫(desert)’, 그리고 ‘필요(need)’이다. 자유교환은 자유선택을 의미하는 것인데, 분명 이는 특정한 분배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응분의 몫은 상벌의 부여와 관련된 것이며, 응분의 양을 측정하고 계산하는 것은 상당한 논쟁을 예고한다. 그리고 필요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

45) 가령 ‘이와 같이 매력적인 남성이라면 어떤 여성으로부터 응당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남성이 바로 저 여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즉 특정한 남녀간의 사랑은 오직 그들 자신들에 의해서만 분배될 수 있을 뿐이며, 이런 문제들의 경우 응분의 몫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들이 어떤 지침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앞의 책, p. 61-62.

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분배 원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가지 원리들의 적용의 영역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기준들 가운데 하나가 획일적으로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면 그것은 비열한 전제(tyranny)를 가져올 뿐이다. 결론적으로 왈쩌는 다양한 영역들과 사회적 재화들에 맞게 각각의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왈쩌가 『정의와 다원적 평등』에서 이렇듯 세 가지 분배 원칙을 제시하고 설명한 것은, 이러한 기준들이 그 고유한 영역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상이한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상이한 이유들 때문에 상이한 절차에 따라 상이한 가치들이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왈쩌의 정의론에서 ‘정의의 원칙’은, 어떠한 일반적이고 단일한 분배의 원칙이 될 수 없으며 다원적인 영역에서 다원적인 분배 기준들(정의의 원칙)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론이 현대사회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주장하는 평등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및 돈의 특수한 전제에 대항하는 투쟁’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의 전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사회의 모든 영역의 곳곳에서 이러한 금권 지배가 나타날 경우, 결코 사회 정의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의에 대한 인식은 매우 현실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왈쩌는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결코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회, 혹은 그렇게 이용될 수도 없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정의로운 사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사회는 바로 사회적 가치들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이해 속에 존재하는 실천적 가능성이며, 이런 가능성은 지금 여기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⁴⁶⁾고 말한다. 즉 정의로운 사회 혹은 평등한 사회는 상상 속에서는 결코 고안 될 수 없다. 왈쩌의 말대로, 그 동굴 안에, 그 도시 안에, 그 땅 위에 머물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들의 세계에 대한 해석이야말로 진정한 정의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정의에 대한 고민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왈쩌의 정의론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2. 기존의 정의이론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롤스와 왈쩌의 정의론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⁴⁷⁾

	롤스	왈쩌
정의론	공정으로서의 정의	정의영역론
정의원리	차등의 원칙	자유선택, 필요, 응분의 몫
정의이념	평등주의	다원주의
정당화	원초적 입장	사회재화론
초점	분배	분배
부정의의 원인	불평등	지배
과제	역차별	경계

46) 앞의 책, p. 20.

47) 임의영,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적 심화를 위한 정의론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2호, 2003, p. 60. <표1>정의론의 비교 참조.

롤스와 왈쩌의 정의론은 각각 자유주의적 정의론과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정의의 문제를 각각의 측면에서 다르게 인식하고,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주목할 점은 두 학자의 정의 이론이 가지는 차이가 아니라, 하나의 공통점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두 진영의 정의이론이 단지 분배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의이론은 정의 이론 중에서도 특히 ‘분배적 정의 이론’이라고 하는 편이 옳다. 이처럼 기존의 정의 이론들은 이와 같이 분배적 정의의 문제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만을 다루고 있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재화가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⁴⁸⁾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정의 담론은 이러한 분배적 정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부정의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재화의 분배 문제에만 치우친 정의가 아닌 폭넓은 사회정의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의 담론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 간의 갈등, 다문화(다민족, 다종교) 사회의 정착화, 정상적 사회질서에서 배제된 소수자의 권리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사회 부정의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다차원적 진단을 통해 부정의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를 새롭게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이론은 어떠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48) 1980년대 후반, 유럽의 Marxism의 지배와 미국의 Rawls(롤스는 돈이나 권력과 같은 사회적 재화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체계적인 설명을 했다. Ben Kotzee, “Educational Justice, Epistemic Justice, and Leveling Down”, 『Education Theory』, 63(4), 2013, pp. 331.)의 만연한 영향 때문에 정치적인 요구의 표준적 이론의 원리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구체적인 차이점과 관계없이 합의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불평등이 어떤 형태이든간에 즉각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이다. Axel Honneth, “Recognition and Justice: Outline of a Plural Theory of Justice”, 『Acta Sociologica』, 47(4), 2004, pp. 351.

부정의에 대한 다차원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부정의의 극복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가. 사회적 부정은 각각의 삶의 차원(경제적 영역, 문화적 영역, 정치적 영역)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 차원에서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불평등의 문제가, 문화적 차원에서 인정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무시가, 정치적 차원에서 참여가 부정될 때 정치적 배제(대표 불능)가 각각 발생하게 된다.

각각의 영역에서의 사회적 부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불균형 분배는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사회 갈등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분배는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오고, 한국사회 역시 IMF 위기 이후 급속히 확대되었던 중산층의 몰락, 평생고용의 붕괴, 그리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신빈곤층의 등장과 같은 문제들에 봉착해 있다”⁴⁹⁾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부정의 이외에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부정은 합당한 인정의 요구에 대한 부정이나 거부에서 비롯된다. 악셀 호네프의 주장에 따르면 한 사회의 주체들은 먼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기대한다. 즉 주체들은 자기 자신의 긍정적 자아실현을 위해 타자로부터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주체들의 정당한 기대가 사회에 의해서 부정될 때 분명한 부정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역시 성, 인종, 민족, 종교, 출신지역, 문화적 특성 등에 따른 구조적 오인(misrecognition)과 멸시(disrespect)가 존재하고 이것들이 사회구성원들의 건강한 자아의 형성과 그 실현을 방해하면서도 정의롭지 못한 사회적 질서가 재생산되고 있다.”⁵⁰⁾

49) 김문조, 『한국사회의 양극화』 (과주: 집문당, 2008), p. 40.

50) 이문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을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의 정

즉 현대 사회의 갈등은 이처럼 왜곡된 지배질서, 인정질서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생활세계는 그 자체로 왜곡된 방식의 가치평가 혹은 인정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주의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은 그것이 사회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물질적 생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로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보상도 필요치 않은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외에도 우리는 소수자들에 대한 수많은 왜곡과 무시의 경우들을 생활세계 내부의 왜곡된 인정질서에 관한 사례들로 제시할 수 있을 것”⁵¹⁾이다.

이처럼 사회 부정의로 소수자 문제의 부상은 오늘날 차이에 대한 ‘인정’을 중심적인 사회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있다. “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과 그에 대한 사회정치적 저항은 오늘날 사회갈등의 중심축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가능성의 확대와 더불어 자발적 소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화를 통한 이주의 물결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소수자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⁵²⁾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엇보다도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부정의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 요구가 무시되고 삶에 필요한 정도의 기본적 재화조차도 부정되고 있다”⁵³⁾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부정의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나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부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작 그들 자신의 운명을 다루는 논의에서는 언제나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⁵⁴⁾이다. 이는 경제적인 차원과 문화

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3호, 2012, pp. 25.

51) 김원식, “생활세계 식민주론의 재구성: 배제, 물화, 무시”, 『사회와 철학』, 제18호, 2009, pp. 108.

52) 앞의 글, pp. 108-109.

53) 이상환,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것의 차원”, 『사회와 철학』, 제12호, 2006, pp. 153.

54) 앞의 글, pp. 153.

적인 차원의 부정의 외에도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다면 정치적 영역에서의 부정의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프레이저는 일상적인 정치적 부정의로 “특정한 정치공동체 내부에서, 왜곡된 의사결정 규칙들이 이미 구성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정치적 발언권을 손상시켜 그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에 발생한다”⁵⁵⁾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차원에서 부정의는 ‘대표 불능(misrepresentation)’으로 불린다. 더 나아가 프레이저는 이러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대표 불능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일상적인 정치적 대표 불능으로, 이는 정치적 의사결정 규칙이 공동체에 포함된 어떤 사람들이 동료로서 참여할 기회를 부정당할 때 발생하게 된다고 본다. 이와는 다르게 두 번째는 잘못 설정된 틀의 문제⁵⁶⁾로, 잘못 설정된 틀로 인해 구성원과 비구성원을 확정함으로써 고려대상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에서 특정 사람을 완전하게 배제⁵⁷⁾하게 될 때 부정의가 발생한다. 전지구적 시대에 들어와서 틀의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후자의 문제가 중요한 정의의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는 대표 불능의 첫 번째 사례인 일상적인 정치적 대표

55)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서울: 그린비, 2010), p. 20.

56) 이는 프레이저에 따르면 ‘메타-정치적 부정의’를 설명하는 데에도 역시 기여한다. 메타-정치적 부정의는 정치적 공간을 제한된 정치공동체들로 분할함으로써 분배, 인정, 대표에 관한 일차원적 질문들의 틀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초국적인 부정의를 국가적인 문제로 만드는 경우에 이러한 부정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의의 ‘당사자’문제 자체가 부당하게 정의된다.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들은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고려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구적 빈곤층의 요구들이 취약한 국가나 실패한 국가들 내부의 국내 정치적 장애만 제한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을 약탈하는 국외적 요인들과 대결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는 것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프레이저는 잘못 설정된 틀(misframing)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종류의 메타-정치적 대표 불능이 야기된다고 보고 있다. 앞의 책, p. 21.

57) 박건, “낸시 프레이저: 재분배, 인정, 그리고 대표의 3차원 정의와 페미니즘 운동”, 『여성이론』, 제 24호, 2011, pp. 95-96.

불능의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영토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 부정의, 즉 국가 내에서 정치적으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더욱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정치적 공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재분배나, 문화적 영역에서의 인정 역시 주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부정의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물질적 재화를 분배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필수적인 물질적 재화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분배되지 않는 경우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적 부정의의 한 유형이 된다. 또한 사회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대한 문화적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무가치한 존재로 낙인찍히고 무시당한다면, 그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적 삶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문화적 무시는 사회적 부정의의 한 원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고유한 정치적 부정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들이 정치적 발언권 자체를 박탈당하고 배제당하는 경우, 잘못된 제도를 통해서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하는 경우 정치적 대표 불능의 상황이 발생”⁵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회 부정의의 원인과 양상이 다양하게 분석적으로 구별되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이해 역시 일차원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58) 김원식, “지구화 시대의 정의(正義)”, 『철학탐구』, 제28집, 2010, pp. 121-122.

Ⅲ. 통합적 정의이론의 내용과 특성 : 3차원적 접근

1. 재분배인가, 인정인가

1) 분배로서의 정의문제

지금까지 사회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영역은 바로 경제적 차원의 분배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분배로서의 정의문제는 주로 권리의 동등한 분배와 소득과 재산 등의 경제 재화의 배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으며 많은 이론들이 이러한 경제적 차원의 정의의 실현을 위한 주장을 해왔다. 이는 김리카와 같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정의의 체계를 사람들이 가치 있는 재화들(자원, 자유 등)에 대해 타인들에게 정당한 요청의 사회적 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자격부여의 체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 ‘Ⅱ. 정의이론의 현재와 한계’에서 정의(正義)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보면서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자유주의적 정의론이든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이든 모두 분배적 정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살펴 본 롤스의 정의론과 왈쩌의 정의론은 서로 다른 정의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둘 모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재화가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전지구적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초국적 자본, 정보 및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이동이 가져온 초국가적 초지역적 맥락 속에서 한편으로는 국가 공동체의 의미가 약해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적·종족적·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승인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9.11 사태에서 최고의 경악스러운 면모를 보였던 이러한 모순되고 갈등적인 구조는 분배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자유주의 논의와 함께 차이의 정치학, 인정의 정치학 등에 대한 새로운 관심⁵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원하던 원치 않던 다종족(multi-ethnic) 다민족(multi-national)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전지구적 맥락 안에서 차이의 인식과 인정이 요구되고 있다.”⁶⁰⁾ 다시 말하면 정의의 문제는 더 이상 “표준적인 목표로 ‘불평등의 제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는 멀시나 무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로 나타난다”⁶¹⁾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남성들과 결혼하기 위해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온 신부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문화적 차원에서의 준비과정 없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단일민족의 신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민족성’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곳으로 이주해 오는 타자들에 대한 의식이 당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이 시대가 ‘다문화’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에 맞는 의식(인식)수준이나 관련된 담론들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9)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2호, 2007, pp. 130.

60) 앞의 글, pp. 130.

61) Axel Honneth, “Recognition and Justice: Outline of a Plural Theory of Justice”, 『Acta Sociologica』, 47(4), 2004, pp. 352.

2) 인정(認定)에 대한 요구

독일의 철학자 헤겔(G. W. Hegel)은 『정신현상학』의 “자기확신의 진리”장에서 “타자의 인정 없이 인간의 정체성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만약 우리가 독립성과 주권을 확인받기 위해 타자를 모두 부정하고 배제한다면 결국 자신의 주권을 확신시켜줄 타자도 함께 잃게 된다는 것이 바로 헤겔의 논리”⁶²⁾이다. 특히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 헤겔은 주인이 타자를 노예로 만들어 부정하는 경우 자신의 주권 역시 진정으로 확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즉 주권이나 독립성과 같은 인간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를 부정함으로써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인정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는 것”⁶³⁾이다. 이처럼 인정(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개개인에게 자기실현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추동력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인정의 욕망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존중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원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정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재분배(redistribution)의 문제⁶⁴⁾뿐만 아니라 인정(recognition)의 문제⁶⁵⁾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악셀

62) 이현재, “물화(物化)는 인정(認定)을 망각한 결과이다”, 『사회비평』, 제36권, 2007, pp. 247.

63) 앞의 글, pp. 247-248.

64) 재분배의 정치는 사회의 경제구조에 뿌리내린 사회경제적 부정의에 초점을 맞추는데 착취, 경제적 주 변화, 경제적 박탈이 이러한 부정의에 해당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 노동 분업의 재편성, 투자 결정의 규제 등 경제적 재구조화가 요청된다. 재분배의 정치에서 공공정책의 대상은 시장이나 생산수단과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 경제적으로 결정되는 계급 혹은 계급과 유사한 집단들이며, 그 목표는 기회와 문화에 있어 집단 간에 존재하는 계급적 차이를 축소하는 것이다.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2호, 2007, pp. 142.

65) 인정의 정치는 표현, 해석, 의사소통의 사회적 양식에 뿌리 내린 문화적 부정의에 초점을 맞추는데 문화적 지배, 인정하지 않음, 경멸 등이 이러한 부정의에 해당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천하게 여겨진 집단의 손상된 정체성과 문화적 산물들을 상향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문화적 다양성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문화적 편견과 차별을 생산하는 재현, 해석, 소통 등 상징적 체계의 사회적

호네프트(Axel Honneth)⁶⁶⁾와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정의와 관련된 논의에서 ‘인정(recognition)’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⁶⁷⁾

(1) 호네프트의 인정이론

그렇다면 ‘인정(認定, recognition)’이란 무엇인가. 인정은 바로 “각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차이를 인정받아야 한다거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규범적인 생각”⁶⁸⁾으로 볼 수 있다. 정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인정 문제의 대두는 정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의로운 분배의 문제를 넘어서 본질적으로 “주체들이 서로를 어떻게,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는나”⁶⁹⁾ 하는 점과도 결부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인정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인정’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자 각 개인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의식을 가지게 하는 심리적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먼저 호네프트는 인정의 형식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것은 사랑, 권리 그리고 연대이다. 인간은 사랑이라는 인정형식을 통해 정서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로 인정되며, 자신의 구체적 욕구 또한 사랑을 통해 충족된다. 또한 상호 인정

패턴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요청된다. 인정의 정치에서 공공정책의 대상은 인정의 관계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존중, 존경, 품위를 누리는 신분 집단이며, 목표는 집단 차이를 정하는 것이다. 앞의 글, pp. 142-143.

66) 호네프트는 상호 인정에 대한 표준적인 개념을 발전시킨 헤겔의 사회 철학 프로그램을 재생함으로써 나타나는 몇 가지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인정이론에 대한 논의에 있어 역사적인 깊이를 더하려고 노력한다. Ibid., pp. 44.

67) 주요한 카테고리들은 더 이상 ‘균등 분배’ 또는 ‘경제적 평등’이 아니라 ‘존엄’과 ‘존경’이다. 낸시 프레이저는 ‘재분배’에서 ‘인정’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대한 간단한 공식을 제공했다. 전자의 개념은 현존하는 재화를 분배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정의에 노력을 기울인 반면, 후자는 개인 각각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Axel Honneth, “Recognition or Redistribution?: Changing Perspective on the Moral Order of Society”, 『Theory, Culture & Society』, 2001, pp. 43.

68) 악셀 호네프트,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서울: 동녘, 1996), p. 5.

69) 앞의 책, p. 6.

관계는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형성된다. 즉 권리의 동등한 인정을 통해 각 개인은 자신의 동등한 인격을 인지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 안에서 각 개인은 자기만의 특수한 속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된다. 이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정서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인정받는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구체적 욕망, 인격적 권리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여러 가지 인정형식을 통해 확인받고 또 실현”⁷⁰⁾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인정을 통해 각 개인은 비로소 한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인정의 이념이 실현되기보다는 좌절되는 경우가 더 많아 보인다. 이렇게 상호인정을 실현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호네프트는 “물화(物化)”로 명명한다. 또 그는 “인간 존재의 물화는 앞서 인정했다는 사실을 시야에서 놓치거나 부인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즉 물화는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것들에 부여된 모든 추가적 의미측면들에 대해 주의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특정한 종류의 “눈멀(blindness)”이 인식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여러 실존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객체로서 확인하며 지각하고 만다는데 문제가 있다.

호네프트는 인정의 형식 중 ‘권리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권리 인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묘사되는 관계가 무엇보다도 타인과 내가 공동체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배분하게 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공통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를 권리 인격체로 인정하는 관계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종류나 사회 내에서 이 권리를 산출하는 정당화 방식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이 뜻하는 것은, 모든 인간 주체가 어떤 권리이든 그것의 담지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70) 이현재, “물화(物化)는 인정(認定)을 망각한 결과이다”, 『사회비평』, 제36권, 2007, pp. 248.

그가 공동체의 성원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을 때라는 기본적인 사실이다.⁷¹⁾

이러한 주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모든 인간은 ‘권리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가진 담지자이며, 이러한 인정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호네프트는 또한 이러한 사회적 인정관계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⁷²⁾

인정 방식	정서적 배려	인지적 존중	사회적 가치 부여
개성의 차원	욕구 및 정서 본능	도덕적 판단 능력	능력, 속성
인정 형태	원초적 관계 (사랑, 우정)	권리 관계 (권리)	가치 공동체 (연대)
진행 방향		일반화, 실질화	개성화, 평등화
실천적 자기 관계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부여
무시의 형태	학대, 폭행	권리 부정, 제외시킴	존엄성 부정, 모욕
위협받는 개성의 요소	신체적 불가침성	사회적 불가침성	‘명예’, 존엄성

앞선 논의에서 이미 인정 형태가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 인정 형태를 구별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무시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여기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은 이러한 인정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되는 무시의 형태이다. 이러한 무시의 형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부정의의 모습이며 이것들은 한 개인에게서 특정한 자기 정체성 요구에 대한 인정을 박탈함으로써 한 개인의 실천적 자기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무시들은 “그것이

71) 악셀 호네프트,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서울: 동녘, 1996), p. 190-191.

72) 앞의 책, p. 220.

각 주체의 행위 자유를 저해하거나 해를 입히기 때문에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개인이 상호 주관적인 과정에서 획득한 적극적인 자기이해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해로운 것”⁷³⁾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무시의 형태(한 개인의 신체적 불가침성이라는 층을 건드리는 무시의 유형)는 한 인간에게서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폭력으로 빼앗는 실제적 학대의 형태들이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인격적 굴욕의 형태이다. 이러한 무시의 형태는 한 개인의 기본적인 자기 믿음을 파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무시의 형태는 한 개인의 자기 존중을 훼손하는 굴욕에 해당하는데, 이는 한 사회 내에서 특정한 권리의 소유에서 배제된 개인들에게 가해진 무시의 방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의 부정이나 사회적 배제 속에 존재하는 무시 형태는 단지 개인적인 자주성에 대한 폭력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자신이 완전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상호 작용 상대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호네프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무시의 경험은 사회적으로 타당한 권리 요구들이 각 개인에게 유보된다는 것이며, 이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는 주체로 인정받으려는 상호 주관적 기대가 훼손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권리 부정에 대한 경험은 전형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상호 작용 상대자인 자기 자신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존중을 잃어버리게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시의 형태는 각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정과 관계가 있다. 이 때 인정에 대한 무시는 각 개인이 그가 집단적 연대를 통한 격려에 힘입어 어렵게 찾아낼 수밖에 없는 자기실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잃게 된다. 이는 수행자에 대한 자기실현 방식에 대한 가치 평

73) 앞의 책, p. 222.

가 절하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활을 공동체내에서 긍정적인 의무가 부여된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그로 인해 개인은 개인적 자기 가치 부여의 상실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무시 즉, 신체적 학대, 권리 부정, 가치 부정과 같은 사회적 모욕에 대해 인간 주체는 중립적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 투쟁을 하게 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요구에 대한 “무시의 경험에 동반하는 모든 부정적 감정의 반응은 그 자체 속에 이미 그 관련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가해진 부정의를 인지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정치적 저항’⁷⁴⁾의 동기를 갖게 하는 가능성을 포함”⁷⁵⁾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투쟁(정치적 저항)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는 무시당한 경험이 사회적 저항으로 드러난 인정 투쟁이야말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 현실 내부에서 발전과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도덕적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는 각 개인이 이러한 인정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모욕을 느낄 만큼 무시당했던 자신의 속성 자체를 공개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상실된 자기 존중을 어느 정도 되찾게 된다고 본다. 또한 이에 따라 강화된 인정 경험은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 연대를 형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연대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호네프는 모든 사회적 투쟁과 갈등의 형태를 원칙적으로 인정 투쟁이라는 동일한 유형으로 이해한다. 즉 모든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현실은 무시의 형식으로 해석되며, 정의(正義)란 바로 ‘타자(他者)에 대한 인정’

74) 과거 흑인들의 인권 운동이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든지, 노동 3권의 요구가 사회적 참여를 위한 실질적 수단의 결여에 대한 대항의 의미를 갖는다든지, 여성이나 특정 지역의 사회 참여 배제가 항상 권리상의 실질적 차별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은 이에 대한 단적인 예가 된다. 또한 우리에게 생소한 경험이지만 동성 연애자들이 사회적 배제 구조에 저항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요구한다든지, 미국의 인디언이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든지, 캐나다의 퀘벡주가 ‘프랑스어’ 보호를 위해 연방법에 반하는 특수한 언어 정책을 채택한다든지 하는 점은 차이의 인정과 권리의 동등한 인정을 둘러싼 또 다른 지평의 논쟁이다. 앞의 책, p. 15.

75) 앞의 책, p. 233.

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他者)란 “나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나와 다른 사람, 우리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아닌 사람을 말하며, 따라서 남성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여성, 자국민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주민, 이성애자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동성애자는 이들 중심부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타자에 해당”⁷⁶⁾된다. 그런데 타자의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 우리, 남자, 자국민, 이성애자가 중심인 한, 타자는 이 중심부 사람들과 위계적 관계를 갖는다. 타자는 진리에 대해 허위, 선에 대해 악, 합리성에 대해 비합리성, 정상에 대해 비정상, 우등에 대해 열등의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타자는 중심으로부터 배제되고 허위, 악, 비합리성, 비정상, 열등이란 이름하에 억압”⁷⁷⁾된다. 호네프는 바로 이러한 ‘타자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하는 부정의를 지적하는 바이다. 이러한 불인정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정의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불인정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호네프의 주장과 같이 “집단과 개인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은 정의 개념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⁷⁸⁾고 판단된다.

(2) 프레이저의 인정이론

‘인정(recognition)’의 문제⁷⁹⁾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76) 악셀 호네프, 문성훈 외 3인 옮김, 『정의의 타자』(과주: 나남, 2009), p. 9.

77) 앞의 책, p. 9.

78) Axel Honneth, “Recognition or Redistribution?: Changing Perspective on the Moral Order of Society”, 『Theory, Culture & Society』, 2001, pp. 44.

79) 프레이저는 문화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불행한 결합이 인정의 정치에 들어서게 했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사회주의자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추구했다면 다른 하나는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에 대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정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정치적 이론자들에 의해 소생된 헤겔 철학의 유서 깊은 개념은 이전 학자들의 노력의 명백한 특징을 잡아냈다. 그것은 차이점을 유지하는 것을 즉각적인 평등보다 더 중요시했다는 점이다. Nancy Fraser, “Mapping the Feminist Imagination: From Redistribution to Recognition to Representation”, 『Constellations』, 12(3),

호네프의 주장과 공통점을 갖지만, 프레이저는 모든 사회적 불의를 인정과 문화의 문제로 환원시켜보는 호네프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한다. 정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앞서 살펴본 “호네프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무시나 오인이 한 개인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면서 그 개인의 원활한 자아실현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그 개인이 윤리적으로 좋은 삶을 사는 것을 애초에 불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반면에, 프레이저는 오인이나 무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거나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특수한 권력관계에 의하여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에서 오랫동안 제도화되어서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사회적 결과물이어야 한다”⁸⁰⁾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무시나 오인이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시와 오인이 특정한 집합체에 속한 개인들에 대하여 사회생활에서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정하는 고착화된 사회 제도들과 연결”⁸¹⁾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문제가 되는 핵심은 “무시나 오인으로 이끄는 문화적 가치판단이 제도적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사회의 권력구조에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⁸²⁾는 사실이다.

이처럼 프레이저는 경제적 재분배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나, “경제적 재분배 문제를 도외시하고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만을 정의의 기

2005, pp. 298.

80) 이문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을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3호, 2012, pp. 34.

81) 앞의 글, pp. 35.

82) 덧붙여서 말하자면 프레이저가 이와 같이 객관적 관점에서 인정문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는 인정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 즉 나쁜 인정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너무 지나친 인정에 대한 강조는 인정받는 집단의 결속을 강화시켜서 그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특수 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집단마다 다르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일부 서구 사회에는 인종적 편견에 사로잡힌 나찌즘을 추종하는 집단이 있는데 과연 이들도 특수한 문화를 소유한 집단으로 보호받아야 할 집단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특정한 종교를 따르는 집단 안에 있는 개인들의 자유의 구속을 그 종교의 전통을 인정한다는 구실로 방지해야 하는지도 문화적 정체성과 주관적 자아실현만을 강조하는 인정이론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앞의 글, pp. 35.

본원칙으로 보는 접근은 정의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될 수 없다”⁸³⁾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론은 재분배와 인정을 동시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프레이저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만 하는 장애로 인정의 문제(무시, 멸시, 오인 등)를 부각시켜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호네트와 프레이저는 모두 현대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의의 문제가 경제적 영역에서의 재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적 차원에서의 인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투쟁이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둘 다 동의한다. 그러나 호네트와 프레이저의 주장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⁸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네트와 프레이저는 현대사회가 부의 불공정한 배분과 문화적 오인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둘의 극복을 사회적 정의 실현의 핵심에 놓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부의 배분과 인정과의 관계’를 다르게 보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호네트는 인정 일원론으로 부의 배분 문제와 같은 경제적, 사회 구조적 문제도 인정이라는 문화적 관점으로 환원시켜 해석한다. 즉 존중과 존경의 질서가 확보되면 분배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83) 앞의 글, pp. 33.

84) 인정과 재분배에 관한 논의는 동시대의 인정 이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논의이다. 낸시 프레이저와 악셀 호네트의 논쟁은 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오면서 처음의 단계에서부터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온 상태이다. 비록 이것이 연구한 학자들에게 프레이저의 접근 또는 호네트의 접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논의를 마무리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 두 가지 접근 방법 중 좋은 요지들을 조화/중재시키는 것이 좋다. 외부적인 차원에서 두 개의 입장이 가져올 최고의 관점을 채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들의 각각의 논리를 고려하는 것으로도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Christian Lazzeri,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Rethinking N. Fraser’s Dualistic Model”, 『A Journal of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10(3), 2009, pp. 307.

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프레이저는 이러한 관점을 비판하고, 이원적 정의관⁸⁵⁾을 주장한다. 이는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모든 인간의 집합체는 “경험적”으로는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을지라도 “분석적”으로는 경제와 문화는 분리가 가능하고⁸⁶⁾ 또 정의론을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이 둘은 반드시 분리시켜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⁸⁷⁾

다소간의 입장 차이를 보이지만 호네트와 프레이저의 주장 모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 간의 갈등이나 다문화·다민족·다종교 사회의 정착화, 사회 질서에서 배제된 소수자의 권리문제 등과 결부된 문제들을 사회정의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필수요소로 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들의 주장처럼 현대사회에서의 인정의 문제는 중요한 정의의 문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나 집단이 겪고 있는 문화적 오인, 무시, 멸시의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85)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상들은 분배의 문제와 인정의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분석적으로는 분리시켜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재분배를 강조하는 정의론은 택시를 몇 시간 동안이나 잡을 수 없었던 뉴욕의 증권가에서 성공한 흑인 브로커의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고 프레이저는 말한다. 이 경우 흑인이 느꼈던 분노는 경제적 배분이 아닌 문화적 오인과 편견에서 나온 것으로 정의론이 재분배 문제에만 집착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프레이저가 드는 또 다른 예는 미국 동부지역에서 실직하여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백인 남성 노동자의 경우이다. 이 백인 남성 노동자는 미국 사회에서 인종적으로나 성적으로 항상 문화적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현재 느끼는 사회적 불의는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따라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역의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구조적 모순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프레이저는 분배와 인정의 문제는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사례 따라 강조점의 차이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이문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을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3호, 2012, pp. 37.

86) 프레이저는 재분배와 인정의 효과를 혼합시키는 “perspectival dualism”의 개념을 이끌었다. “perspectival dualism”의 개념은 재분배와 인정을 서로 다른 정의의 영역으로 다루는 것을 거부한다. 재분배와 인정은 서로 다른 분석적인 관점으로 여겨지지만 경제와 문화를 분리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다. Christian Lazzeri,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Rethinking N. Fraser's Dualistic Model”, 『A Journal of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10(3), 2009, pp. 316.

87) 이문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을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3호, 2012, pp. 36-37.

2. 재분배와 인정을 넘어, 참여적 평등으로

1) 정치적 대표 불능의 해결을 통한 정의의 실현

지금까지의 정의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정의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사회 부정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실제적으로도 전후 복지 국가의 전성기에는 불평등 분배의 문제가 사회 부정의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정의에 관한 사유의 주된 관심거리가 분배의 문제였다. 그러나 그 후 신사회 운동과 다문화주의의 부상과 더불어 사회 부정의로 무시나 떨치, 오인 등으로 인한 차별의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의 중심은 인정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正義) 담론은 재분배와 인정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 두 차원에서의 부정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의 부정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정의의 세 번째 차원은 정치적인 것⁸⁸⁾이다. 정의의 정치적 차원은 사회적 귀속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서 누구를 구성원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차원은 정당한 분배와 상호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범위 안에 누가 포함되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차원은 의사 결정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경제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 모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들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관련을 갖는다. 다

88) 프레이저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세계가 당면한 가장 절박한 부정의의 문제가 자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 요구가 무시되고 삶에 필요한 정도의 기본적 재화조차도 부정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시인한다. 그런 부정의의 문제는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유감스럽게도 매우 불행하고 궁핍한 여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부정의는 그런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정작 그들 자신의 운명을 다루는 논의에서 언제나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치적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심화’ 일 것이다. 이상환,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것의 차원”, 『사회와 철학』, 제12호, 2006, pp. 153.

시 말하면 재분배와 인정에 대한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그러한 주장들에 제기되고 판결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역시 말해준다. 프레이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성원과 절차 문제에 집중하는 정의의 정치적 차원은 주로 대표 문제와 관련된다. 정치적인 것이 가지는 경계설정의 측면이라는 수준에서 보면, 대표는 사회적 귀속과 관련된 문제이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서로에게 정의 요구를 제기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에 누구를 포함시키고 배제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의사결정 규칙 측면에 속하는 또 다른 수준에서 보면, 대표는 공적인 논쟁과정을 구조화하는 절차들의 문제와 연관된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것은 정치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요구를 제기하고 그들 사이의 논쟁을 판결하는 수단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두 수준 모두에서 대표의 관계가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⁸⁹⁾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혹시 ‘실제로 대표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치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규칙이 공적인 토의에서 모든 구성원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규칙이 공적인 의사결정에서 모든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표하고 있는지’ 등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쟁점들은 정치적 영역에서의 대표와 관련된 사항들이며,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차원에서 부정의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처럼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정의의 차원은 다른 차원들과 명확히 구별되는 영역으로, 이 영역에서의 부정의인 대표 불능(misrepresentation)의 해결을 통해만 정치적 영역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89)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서울: 그린비, 2010), p. 39.

정치적 영역의 부정의라고 할 수 있는 ‘대표 불능(misrepresentation)’은 정치적 경계 그리고/혹은 의사결정 규칙들이 잘못 기능하여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 영역을 포함하는 제반 사회적 상호작용들에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할 가능성을 박탈당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대표 불능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의사결정 규칙이 공동체에 포함된 어떤 사람들이 동료로서 완벽하게 참여할 기회를 부정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부정의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치적 차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정치공동체 안에서 일차원적 정의 요구들(재분배나 인정)을 주장할 기회마저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정의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대표’이다. 대표성이 실현된 상태, 즉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로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의한 상태인 대표 불능을 이해하고 그러한 부정의가 시정된 상태를 정의로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러한 대표 불능은 상이한 두 수준으로 구별되는데, 먼저 우리가 한 공동체 내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 공동체에 포함된 어떤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당할 경우 이러한 부정의를 ‘일상적인 정치적 대표 불능’이라고 한다. 이와는 다르게 잘못 설정된 틀로 인해 공동체의 경계들이 몇몇 사람이 정의에 관한 승인된 논쟁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잘못 설정된 경우에도 부정의가 발생한다. 이러한 두 수준의 대표 불능이 사라질 경우 정치적 차원에서의 정의(正義)가 가능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시대에 적합한 정의론은 삼차원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시대의 정의론은 재분배와 인정뿐만 아니라 대표의 문제까지도 포괄해야 한다. 즉 경제적·문화적·정치적 차원들을 병합하면서, 각각의 차원에서 야기되는 부정의들을 확인하고, 그러한 부정의에 대한 가능한 치유책들을 평

가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의 각 영역들은 분명히 구분된다. 하지만 우리는 각 영역들이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 배제는 특정한 사람들의 경제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상호인정의 객관적 조건을 훼손하며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겪게 된다. 반면에 소수자에 대한 무시는 사회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를 위한 상호주관적 조건을 훼손한다. 최소한의 문화적 인정을 결여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적 삶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화적 인정은 상호인정과 동등한 참여를 위한 문화적, 상호주관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무시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사회적으로 종속적인 신분에 위치시켜 상호인정의 상호주관적 조건을 훼손하게 되며, 당사자들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침해를 경험하게 된다.”⁹⁰⁾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한 ‘정의(正義)’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막는 정치, 경제, 문화 차원의 모든 장애물의 제거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2) 정의의 가장 일반적 의미 : 동등한 참여

그렇다면 지금까지 3차원적 접근을 통해 살펴본 정의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프레이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기에 정의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이다. 동등한 도덕적 가치의 원칙에 관한 이러한 급진-민주주의적 해석에 따르면, 정의는 모든 사람이 사회생활에 동등한 동

90) 김원식, “생활세계 식민화론의 재구성: 배제, 물화, 무시”, 『사회와 철학』, 제18호, 2009, pp.115.

료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적 상태를 요구한다. 부정의를 극복하는 것은 누군가가 완전한 당사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⁹¹⁾

프레이저가 제시한 “참여의 동등성(parity of participation)⁹²⁾”은 각각의 측면을 방법론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개념, 즉 규범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제도나 정책은 모든 개인들이 서로를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상호작용하게끔 허용해야한다”⁹³⁾는 원칙이다. 그러나 “경제적 착취·경제적 주변화·경제적 박탈 등 분배구조가 왜곡되면서 생기는 현상, 또한 무시·오인·멸시 등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해 생기는 병리현상 모두 사회의 성원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참여의 동등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정의의 목표점은 “참여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좁혀질 수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인정과 재분배에서 발생하는 불의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⁹⁴⁾고 본다. 프레이저의 참여의 동등성의 원칙과 앞에서 살펴본 3차원적 접근을 통한 정의(正義)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참여의 동등성에 따르면 정의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91)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서울: 그린비, 2010), p. 36-37.

92) 쉽게 말하면 참여의 동등성이 가지는 중요성은 ‘누가 정의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가?’, ‘누구의 흥미와 욕구가 고려되어야 하는가?’ 또는 ‘경제적 재분배와 문화적 인정 혹은 정치적 대표에 관해 격렬히 논의될 때 다른 누군가에게 정의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의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해답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Nancy Fraser, “Who Counts? Dilemmas of Justice in a Postwestphalian World”, 『Antipode』, 41(1), 2009, pp. 281. 또한 프레이저는 “(정의에 대한 논의에 있어)표준적인 핵심은 참여의 동등성이다”라고 주장한다. Nancy Fraser, “Recognition without Ethics”, 『Theory, Culture & Society』, 18(2-3), 2001, pp. 29.

93) 이문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을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3호, 2012, pp. 34.

94)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서울: 그린비, 2010) 참조.

작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곳이다. 이러한 참여적 평등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참여자의 독립과 목소리와 같은 물질적 자원의 분배이다. 이러한 조건은 부, 소득, 노동 등에서 박탈, 착취, 불평등이 내재되어있는 경제적 구조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완전한 참여자가 되는 것을 막는다. 둘째로 사회적 지위 순서는 모든 참여자들의 균등한 존경심을 표현해야 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건은 몇몇 카테고리 내의 사람들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그들과 관련이 있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구조적 패턴을 배제한다. 마지막으로 균등한 정치적 목소리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사회의 정치적 구성이다. 이 조건은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 있는 결정에 공정한 기회를 빼앗을 수 있는 선출의 결정 규칙과 미디어 구조를 지배한다. 이 모든 조건들은 “참여의 동등성”에 있어 필수적이다. 하나의 조건만으로는 부족하다. 첫 번째 조건은 전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배 정의에 중점을 두고, 두 번째 조건은 최근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정의 철학을 강조하고, 세 번째 조건은 오랫동안 중점이 된 민주적 참여 이론을 강조한다. 95)

다시 말하면 정의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고려 상황들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이것은 재분배, 인정, 그리고 대표를 정의(正義)와 관련된 분석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3가지 요소로써 다룬다. 비록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중첩이 되더라도 어느 하나도 다른 것에 비해 축소될 수 없다.”96)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서 ‘동등한 참여(참여의 동등성)’라는 포괄적인

95) Nancy Fraser, “Injustice at Intersecting Scales: On ‘Social Exclusion’ and the ‘Global Po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3(3), 2010, pp. 365.

96) Ibid., pp. 365.

규범적 원칙 아래, 정의의 세 차원을 포섭시킨다. 이 원칙에 따르면, 정의는 모든 사람이 동료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회질서를 요구한다. “정의를 동등한 참여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볼 때, 부정의를 극복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한 동료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⁹⁷⁾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동등한 참여란 “모든 사회적 행위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적 삶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여야만 정당한 것”⁹⁸⁾이 된다. 즉 ‘부의 자원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는 ‘상호 인정 혹은 동등한 존중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정치적 대표와 동등한 발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을 동등한 참여를 통해 규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의에 관련된 질문들이 우리 모두와 관계된 질문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정의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사회정의의 실현은 동등한 참여가 보장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3차원의 각 영역에서의 정의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즉 불평등한 분배(maldistribution)나 신분의 불평등 혹은 무시(misrecognition) 그리고 대표 불능은 이러한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불평등한 분배나 신분의 불평등 혹은 무시 그리고 대표 불능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의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동료로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동등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의(正義)’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자면 현대사회에서 통합적 정의이론이 요구되는 이유는 분배정의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정의이론에서 다뤄지는 ‘정의

97)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서울: 그린비, 2010), p. 108-109.

98) 앞의 책, p. 58.

(正義)'를 결코 정상적 정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존의 정의이론은 현재 우리 사회가 봉착하고 있는 복합적 사회갈등의 성격을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응해 나가는 데에도 많은 한계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배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서의 (정체성)무시의 문제, 정치적 영역에서의 대표 불능의 문제 등을 부정의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앞선 논의에서 사회의 부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부정의 또한 단순히 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부정의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 때 그러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부정의의 시정을 통해 정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정의(正義)에 대해서도 다양하고도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대부분 '재분배'를 위해 노력했던 20세기의 선행자들과는 달리 오늘날의 당사자들은 다양한 정의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 쪽에서는 경제적 재분배를 요구하고 있다면 다른 한 쪽에서는 소수자 집단들의 '인정'에 대한 요구가 존재한다. 또한 재분배나 인정의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평등한 참여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처럼 정의에 관한 담론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요구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정의의 내용을 통합적 접근, 즉 3차원적 접근을 통해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통합적 접근을 통해 파악한 정의이론은 경제적 재분배의 요구와 집단의 특수성 인정의 요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식의 정치적 대표를 추구하는 것, 이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낸시 프레이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의의 내용'에 관한 단일한 일원론적 설명보다는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

(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라는 세 가지 차원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이해가 정의의 문제를 더 잘 고찰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모든 당사자들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서는 경제적 영역에서 필요한 자원을 (재)분배((re)distribution)받을 수 있어야 하고, 문화적 영역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등한 참여를 위한 지위를 인정(recognition)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합당하게 대표(representation)될 수 있어야 한다”⁹⁹⁾는 것이다.

3. 통합적 정의이론이 갖는 의의(意義) : 한국사회에의 적용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해 온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의론에 관한 연구’가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많은 정의이론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에 먼저 앞에서 논의해왔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부정의를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형태의 부정의를 극복한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는 방향으로 정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한국사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진단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합적 접근(3차원적 접근)을 통해 정의이론을 구상하려는 것이 단지 이론적으로만 가능함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처해 있는 현실의 부정의한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이는 곧 우리가 정의에 대한 3차원적 접근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밝히

99) 김원식, “지구화 시대의 정의(正義)”, 『철학탐구』, 제28집, 2010, pp. 121.

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현실적으로도 ‘정의에 대한 3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먼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부정의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부정의를 극복한 새로운 정의로운 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볼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의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문제들 중에 우리가 가장 큰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 즉, 양극화의 문제¹⁰⁰⁾라고 할 수 있다. 한 논문에서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소득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교육비 지출의 차이, 주택 소유 및 아파트 가격 상승문제, 노년보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양극화문제로 수렴되고 있다”¹⁰¹⁾ 고 지적한다. 물론 이러한 ‘양극화’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양극화가 IMF 외환위기로 인해 소득격차와 분배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극화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의 모습으로 드러나며, 이러한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은 사회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정의(正義)는 바로 이러한 양극화의 문제(불평등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하나의 정당한 분배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100)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것이 배분적 정의의 문제이다. ...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배분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서 발생한다. 이 조건들은 바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조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로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부의 집중률이 높아질 경우이다. 둘째로 부유층의 부의 축적과정이 비윤리적이거나 부조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로 부유층의 자기 과시적 소비 형태가 계층 간의 위화감을 확대시키는 경우이다. 방영준, 『공동체, 생명, 가치: 우리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 개미, 2011), p. 222.

101) 정재각,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6권 2호, 2006, pp. 79.

이 때 어떠한 분배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크게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리주의적 정의관’, 또는 ‘사회 민주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 이론들은 시대에 따라 혹은 개인이나 사회에 따라 옹호되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이러한 다양한 정의관들이 제시하는 정의 이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목표는 한 사회에서, 특히 사회의 경제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분배 기준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보이는 부정의의 모습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 양극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정의는 정의에 관한 논의 영역에 분명히 속하지만, 분배정의가 정의에 관한 논의의 전부 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러한 사회를 완전히 정의롭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즉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영역의 사회 문제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부각되는 많은 사회의 부정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정의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 것일까. 실제적으로 한국사회에서도 분배정의 실현의 문제의식을 뛰어넘어, 소외되었던 사회적 소수자¹⁰²⁾들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히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한국사

102) 성이나 계급의 어느 한두 범주나 요소들이 지배적으로 작동하였던 과거사회와 달리, 오늘날의 사회는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 갖가지 범주들과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적이고 다층적인 구조 하에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며, 경합하고 있다. 그 속에서 피지배집단이나 약자, ‘소수자’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게 된다. 이들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장미경,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제39집 6호, 2005, pp. 160.

회는 이주와 이동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사회가 도래하면서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미 한국사회에도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해왔고, 북한 이탈주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만 하고 그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뿐 아니라 여전히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성 불평등의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무시와 경멸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우리의 담론은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1995년을 기점으로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이전에는 돈을 벌기위해 외국으로 나가기에 급급하였다면,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체류 노동자 통계자료를 보면 2012년 6월 환경노동부 추산 합법적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수는 70만 명이고 불법체류자는 법무부 추산 32만 명으로 전체적으로 102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점차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사회의 노동 분야에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들 외국인들을 혈통 공동체로서의 민족의 실질적 공통성을 약화시키는 ‘타자’로 간주하고, 하나의 동질적인 공동체의 획일성 안으로 밀어 넣어져야 할 하위집단으로 보는 전통적 배타주의”¹⁰³⁾의 모습을 띠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배타주의는 다문화 사회와 양립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사회는 모든 배경의 시민들을 동등하게 포용하는 것에 개방적인 ‘포괄주의’”¹⁰⁴⁾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정의 정치’는 현실에서 비대칭적인 인정의 관계를 타파하려는 시도, 즉 ‘인정투쟁’의 노력으로

103) 전태국,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의 내적 성숙의 모색”, 『한국사회학』, 제41집 1호, 2007, pp. 2.

104) 앞의 글, pp. 2.

등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회 갈등을 ‘이해관계’나, ‘재분배’ 등의 개념으로 파악했다면, 이제는 ‘문화적 지배’가 ‘착취’와 ‘불평등’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체성’, ‘차이’, ‘인정’등의 개념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현대사회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다름의 인정에 대한 요구’는 ‘분배정의’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한국사회에서도 다양한 사회운동(인정투쟁)들이 전개되어 왔다. 소수자들은 한 사회에 속해 구성원들과의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있으면서도 여전히 차별이나 무시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무시에 맞서 소수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 인정을 위해 투쟁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함을 정당하게 표현하고 해결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 개선과 더불어 그들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그간에 공공연히 존재해 온 노동자들에 대한 멸시나 차별의 부정의함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단체들의 여권신장을 위한 운동이나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투쟁이 계속 있어왔으며, 탈북자들의 권익을 위한 모임(탈북자동지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움직임, 성 소수자들의 차별 금지를 주장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인정을 위한 투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곳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호네트와 프레이저가 제시하는 ‘인정의 정치¹⁰⁵⁾’는 바

105) 더 나아간 논의로, 프레이저는 이러한 정체성 인정의 정치로 ‘긍정(affirmation)대책’과 ‘변형(transformation)대책’을 제시한다. 긍정대책은 기존 틀 내에서 소수자들의 정체성 인정에 초점을 둔다. 이와 다르게 변형대책은 기존의 틀 자체를 해체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체성의 정치의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 지배적 다수자와 동화하는 방식을 사용

로 이러한 현실적인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지평이 다원화되고 정체성과 차이가 정치화되는 상황에서 ‘인정의 정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접근은 분배정의의 문제를 넘어서 인정의 문제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또 다른 부정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존의 정치제도나 정치과정을 살펴보면 정당이나 이익단체들이 각 개인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우리 사회의 정치제도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영역으로부터 특정 집단이 배제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민족, 인종, 국적, 계급 등의 여러 가지 범주들에 의해 정치적 소수자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역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영역에서 각 개인들의 정치참여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치참여의 다양성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다. 그러한 참여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투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투표라는 제도적 장치가 정치적 평등인 동등한 참여, 즉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정의(正義)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렇듯 정치적 차원에서의 부정의는 투표라는 행위 그리고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부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표행위 이외에 요즘 한국사회에서 많이 보이는 참여의 형태는 ‘항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중요

하는 ‘동화(assimilation)전략’, 그리고 다수자와 소수자의 차이를 반영하는 전략으로 소수자 집단의 차이를 제거하거나 배제하지 않으며 소수자 그들의 경험을 통합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하는 ‘차이 전략’이 있다. 장미경,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제39집 6호, 2005, pp. 164-168.

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 있어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정부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며 안이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결국 거리로 나갔고 ‘시민의 거리정치’를 야기하였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제 이러한 촛불집회는 정치참여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촛불집회를 항의하는 행위로 본다면, 이러한 항의행위는 “분노와 오류나 부정의에 대한 신념을 표출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항의자들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는 직접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가 없는 여건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⁰⁶⁾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항의하는 행위를 통해 한 집단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면, 이현우(2008)는 「정치참여 유형으로서의 촛불집회」에서 항의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항의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전국 유권자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항의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투표참여에도 활발하다는 사실은 이들이 결코 제도정치를 거부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분명 “현 정치질서를 무시하거나 정치구조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정책경쟁이나 대안제시 요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¹⁰⁷⁾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우리는 촛불집회를 단순히 시민불복종이나 정부에 항의하려는 행위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대표’를 직접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106) 이현우, “정치참여 유형으로서의 촛불집회: 대표성과 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pp. 10.

107) 앞의 글, pp. 15.

본 논문에서는 촛불집회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촛불 집회를 정치참여의 한 유형으로 보고, 우리가 왜 촛불집회에 직접 나가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려 하는 것이다. 즉 ‘왜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는데 있어 투표와 같은 제도화된 방식의 참여가 아니라 항의의 방식을 택하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제도적 정치참여에 대해 한계를 느끼고 어쩔 수 없이 ‘항의’라는 정치행위를 택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정치 참여를 단순히 자유로운 주체의 공적인 활동으로만 이해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론상으로는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모두의 정치적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때 우리는 정치 참여의 실질적인 주체, 참여의 방식 등의 논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부정의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부정의를 극복하고 모두가 정치적 ‘대표’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정치적 참여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이게도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IT를 기반으로 유동적이고 빠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개인화된,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일상화된 정치참여의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 양상을 통해 각 개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고, 모두가 ‘대표’가 될 수 있을 때 정치적 영역에서의 정의(正義)가 실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족, 인종, 국적, 성이나 계급 등 여러 가지 범주들에 상관없이 정치적 영역에서의 동등한 대표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성이나 계급, 인종 간의 차별이 은폐되고 평등

한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의관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부정의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실질적으로 정의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내려고 시도하였다.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의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의(正義)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말 뿐인 이론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를 극복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의담론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실질적인(현실적인) 부정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하고, 그로부터 정의(正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역시 정의의 3차원적 접근은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재분배, 인정, 대표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통합되어야만 한다. 부정의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파악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의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정의에 관한 새로운 접근(통합적 접근)이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선 논의에서 이러한 정의의 세 차원을 포섭하는 규범적 원칙이며, 정의의 일반적인 의미로 ‘동등한 참여(parity of participation)’를 제시한 바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이는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사회적 행위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적 삶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正義)는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표되도록 사회가 구조화될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

기 위한 움직임의 한 예로는 동등한 참여를 위한 여성들의 노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여성들이 정치참여의 중요성과 정치적 대표성의 획득이 여성권의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온 것”¹⁰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생겨난 여성 정치 할당제¹⁰⁹⁾는 “법적인 평등을 보장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책결정과 정이나 정치영역에서 과소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내용적 평등을 찾는 데 중요하고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¹¹⁰⁾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갖는 중요한 의의는 이것이 단지 여성의 권익증진만을 위한 것을 넘어서 소수자들의 평등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의 부정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동료로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동등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러한 ‘정의(正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한국사회의 모습을 통해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 이외에도 정의(正義)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파악한 삼차원 이외에도 또 다른 차원에서 부정의들이 언제든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모습을 통해 파악된 부정의들을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정의의 3차원적 접근’ 주장하지만, 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생겨나고 정의사회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된다면 그 문제 또한 제대로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관이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가지는 한계는 우리가 정의에 대한 논의를 할 때

108) 조현옥김은희, “한국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동향과 전망』, 제79호, 2010, pp. 112.

109) 여성정치할당제는 의회 내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로써 또는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립적으로 평등 지분을 획득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정당간부직,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채우는 조치를 의미한다. 앞의 글, pp. 115.

110) 앞의 글, pp. 112.

여전히 정의라는 가치가 구현되는 곳으로 ‘국가’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재분배, 인정 또는 대표의 문제이든, 사회계급, 지위계층, 정치적 힘의 합법적 행위이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들의 정치적 공동체 또는 사회와 일치되는 정의의 영역을 추측했다”¹¹¹⁾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도 역시 그러한 정의 실현의 주체를 국가로 제한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세계화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국가라는 틀을 넘어 초국가적인 정의 주체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정의의 문제가 국가라는 틀 안에서 논의되는 경우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틀의 문제를 인식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의 정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의 이론들이 단순히 우리가 학습하고 이해해야 하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새로운 정의관을 구상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의관은 우리가 현실에 적용하여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의론은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침, 그리고 그러한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일 것이다.

111) Nancy Fraser, “Who Counts? Dilemmas of Justice in a Postwestphalian World”, 『Antipode』, 41(1), 2009, pp. 281.

IV.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

1. 현재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正義)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제대로 된 정의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현실의 부정의에 대한 반성과 그로부터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정의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의교육이 사회과와 같은 교과에서도 사회 정의(正義)의 문제를 다루면서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도덕과에서의 체계적인 정의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도덕과에서는 단순히 정의 이론들을 접하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 또는 ‘우리는 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등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교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의를 교육함에 있어서 도덕과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정의의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들을 더욱 잘 다루기 위해 효과적인 정의교육의 방식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도덕과에서의 정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기존의 정의교육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는지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은 먼저 ‘정의의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현행 교과서에서 정의이론은 『윤리와 사상』에서 ‘IV. 사회사상: 3.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3)자유와 평등의 조화’ 부분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주)교학사 교과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유와 평등은 ‘정의’라고 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이다. 즉 자유와 평등은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함께 정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을 전제로 이 단원에서 정의론을 제시한다. 기존의 교과서에서 다루지는 정의론을 간단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정의론에 대해 따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단원은 없다. 다만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될 때 바람직한 사회, 즉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자유와 평등을 다루는 단원에서 몇 가지 정의이론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3차원적 접근을 통한 통합적 정의이론의 내용을 기준으로 기존의 교과서에 제시되는 정의 이론을 평가해 본 결과, 다루지고 있는 정의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는 정의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경제적 차원에서의 ‘분배적 정의(재분배)’와 관련된 내용들만이 제시되고 있다. (주)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롤스와 왈쩌의 정의론을 다루고 있고, 천재교육 교과서에서는 롤스의 정의론만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행 교과서에서 다루지는 정의이론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비중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경제적 차원의 분배정의의 실현(롤스의 이론)에 치우쳐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렇듯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정의의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정의의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처럼 정의(正義)의 문제는 재분배의 문제를 넘어서 문화적 인정이나 정치적인 대표의 문제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정의교육은 경제적 차원의 ‘분배 정의의 실현’을 제시하는 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제시되고 있는 내용의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의(正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물론 『윤리와 사상』 교

과서에서 문화적 차원에서의 인정 문제나 정치적 차원에서의 평등한 참여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정’의 문제는 ‘IV. 사회사상 : 1.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2) 다원주의와 관용’ 단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다원주의’를 들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용의 미덕이 요청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배우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으로 말미암은 다문화 현상과 여전히 나타나는 지역 간·계층 간의 갈등과 위화감 등”¹¹²⁾은 관용의 정신을 더욱 필요로 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인종이나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문화적 차원에서 ‘인정’의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표’의 문제는 ‘IV. 사회사상 : 2.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 (2) 민주주의와 참여’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의제는 “대표자와 그를 뽑은 다수 시민 간에 입장과 의견이 일치하기 어렵다”¹¹³⁾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려면 절차적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개인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게 된다. 이로써 교과서에도 정의의 한 측면인 정치적 차원에서의 동등한 참여의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의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문화적 차원의 인정의 문제와 정치적 차원의 동등한 참여의 문제가 분명히 다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파편적으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렇게 제시될 경우 인정이나 대표의 문제를 정의(正義)의 문제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112) 박찬구 외 9인, 『윤리와 사상』 (서울: 천재교육, 2012), p. 221.

113) 앞의 책, p. 239.

있다. 즉 학생들은 정의의 문제를 기존의 분배정의 이론으로 제한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인정이나 대표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로 파악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정의(正義)의 영역 안에서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정의의 내용을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정의(正義)에 대한 개념화 작업과 정의의 내용의 체계적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 현재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의 문제로는 ‘정의교육의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가 정의교육을 하는 이유는 정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성향을 기르고 정의로운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의교육이 결코 정의론에 대한 인지적 이해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고 그러한 사회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도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의 교육은 인지적 측면에 치우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도덕과에서의 정의교육의 목표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한 이론으로 롤스가 제시한 ‘정의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지도서를 살펴보면, 주로 인지적 접근을 통해 정의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수업에서 교사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위한 이론으로 롤스가 제시한 정의론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 질문’을 한다. 또한 학생들의 답변을 정리하면서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과 전제 조건인 무지의 베일과 원초적 상황을 설명’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다음으로 ‘롤스가 주장한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자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지도는 끝이 난다.

물론 대표적인 정의이론으로 롤스의 정의론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지적 접근을 통해 단순히 정의론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살펴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도덕과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정의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하는 바가 ‘정의의 내용을 학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욕구하며, 각자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기 때문에 정의교육의 방법은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우리는 기존의 정의교육에서 특히 강조되었던 인지적 접근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정의교육은 결코 지식 중심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서적인 영역의 활동을 통해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정의로운 행동을 도출해내는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만 한다. 이 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접근법으로는 정의로운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접근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의 개선 방향

1) 정의의 내용 :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의론 제시

물론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정의론은 별도의 소단원이 존재하지 않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 부분에서 함께 다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교과서에서는 정의의 내용으로 분배적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 롤스와 왈쩌의 이론만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의론’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조된 관심과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논문의 ‘Ⅲ. 통합적 정의 이론의 내용과 특성’에서 논의되어 온 것과 같이 문화적 영역의 인정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평등한 참여 역시 정의의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의의 내용으로 이러한 통합적 관점이 제시될 때 학생들이 정의(正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정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정의의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는 기존에 제시해왔던 분배 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롤스나 왈쩌의 정의론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의교육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인정과 대표의 문제가 명백히 정의의 영역에 속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차원에서의 정의가 모두 동등하게 고려될 수 있어야 하며, 모두 ‘정의(正義)’와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세 영역에서의 정의가 모두 고려되었을 때 비로소 정의의 내용을 충분히 다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존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적 차원의 분배 정의이론 이외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정의의 내용에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분배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차원에서의 무시나 오인, 멸시가 계속된다면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라는 점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프레이저가 제시한 예로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프레이저가 말한 것처럼, 경제적 재분배를 강조하는 정의론은 “택시를 몇 시간 동안이나 잡을 수 없었던 뉴욕의 증권가에서 성공한 흑인 브로커의 경우”¹¹⁴⁾를 설명할 수 없다. 이

경우 “흑인이 느꼈던 분노는 경제적 배분이 아닌 문화적 오인과 편견에서 나온 것으로 정의론이 재분배 문제에만 집착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¹¹⁵⁾이다. 이러한 경우를 다루기 위해 “정의에 대한 이론은 권리나 재화의 분배를 넘어서야 하는 것”¹¹⁶⁾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에 대한 논의가 경제적 재분배의 문제만을 다루고 인정의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인정의 문제만을 정의의 기본 원칙으로 보고 경제적 재분배의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이는 결코 올바른 접근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덕과 교육에서 정의이론을 다룰 때 경제적 영역에서의 분배 정의 이론만을 다루는 것은 분명 한계를 지닌다. 현대사회에는 많은 불인정(무시, 멸시, 오인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인정은 “사회적 행위자를 특정 기준에 근거하여 열등하거나 결함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의 양식”¹¹⁷⁾에 의해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이성애자는 정상적이고, 게이는 변태라든지, 집안일은 여성이 해야 한다든지, 흑인은 위험하다든지 등”¹¹⁸⁾의 편견의 일종으로, 이는 특정한 집단이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인정은 명백한 부정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과에서 정의이론에 대해 다룰 때 이러한 ‘문화적 차원의 인정’ 문제를 꼭 포함시켜, 학생들이 ‘인정’을 정의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또 다른 정의의 내용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동등한 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정의에 관한 논의에 있어 초기에는

114) 이문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을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3호, 2012, pp. 36.

115) 앞의 글, pp. 36.

116) Nancy Fraser, “Recognition without Ethics”, 『Theory, Culture & Society』, 18(2-3), 2001, pp. 28.

117) 박건, “낸시 프레이저: 재분배, 인정, 그리고 대표의 3차원 정의와 페미니즘 운동”, 『여성이론』, 제24호, 2011, pp. 91.

118) 앞의 글, pp. 91.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회 부정의의 문제들이 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불평등 분배 문제였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의 재분배와 관련된 논의들이 정의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불평등 분배 문제를 벗어난 새로운 부정의들이 출현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적 차원의 무시나 멸시와 같은 불인정이다. 이에 우리는 정의의 내용으로 문화적 ‘인정’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영역, 즉 정치적 차원에서 ‘누구나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가’와 같은 문제가 정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대표 불능’의 문제를 심각한 부정의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대표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정의(正義)를 요구하게 된다.

플레이저도 제시하였듯이 무엇보다도 더 큰 부정의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정작 그들 자신의 운명을 다루는 논의에서 언제나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¹¹⁹⁾이다. 이처럼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정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의 큰 부정의로 인식되어야 하며, 우리가 다루는 정의(正義)는 이러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덕과 교육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정치적 차원의 ‘동등한 참여’의 문제까지 반드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본 논문 ‘Ⅲ. 통합적 정의이론의 내용과 특성: 3차원적 접근’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정의 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내용으로 분배적 정의만을 다루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문화적인 인정과 정치적인 동등한 참여의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도덕과에서의 정의교육은 이러한 3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파악된 정의의 내용을 모두 포

119) 이상환,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것의 차원”, 『사회와 철학』, 제12호, 2006, pp. 153.

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의(正義)를 구상하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기본적으로 먼저 학생들에게 꼭 (재)분배와 관련된 문제들만이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님을 인식시켜 주고, 각 차원의 여러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정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 정의교육의 방법 :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접근

그렇다면 과연 도덕과에서는 ‘정의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도덕교육의 한 영역으로 ‘정의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정의교육의 방법이 도덕교육의 방법론과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먼저 도덕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접근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인지적 접근, 정서적 접근, 행동적 접근이 있다. 인지적 접근은 정서와 행동을 지(知)에 의해 수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덕적 사고와 판단능력을 중시한다. 이와 다르게 정서적 접근은 감정(情)을 도덕적 판단과 행동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도덕적 민감성과 감정을 더욱 중시한다. 또한 행동적 접근은 오히려 행위(行)를 통해 가치와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고 도덕적 실천능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각각의 관점들은 도덕성을 구성하는 요소(인지·정서·행동)들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며, 또한 그에 따라 도덕교육의 방법을 각각 다르게 제시한다.

각각의 관점과 접근들이 모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문제로 지적하고자하는 바는 기존의 도덕교육이나 정의교육에서 특히 도덕적 사고와 판단능력을 중시하는 인지적 접근이 강조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즉 도덕교육이

나 정의교육은 결코 지식 중심의 교과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서적인 영역의 활동을 통해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도덕적(정의로운) 행동을 도출해내는 도덕적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만 한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접근법으로는 도덕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인 통합적인 도덕적 인격(character)을 육성하는 것과 정의교육이 추구하는 정의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교육’과 ‘정의교육’은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적 요소 모두를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다.

도덕교육에서 강조해왔듯이 우리는 도덕성의 요소를 어느 한 측면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와 적절한 정서 그리고 일관된 습관’으로, 즉 통합적으로 파악하여야만 하며 이들의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접근에서 역시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도덕교육을 통해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요소가 통합된 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터스(R. S. Peters)는 도덕발달을 단순히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추론형식에서의 아동 그 이상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도덕발달은 한 개인이 내린 도덕적 결정의 실제 내용,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 느끼고 반응하는 양식, 그 사람 개인의 판단과 감정 등을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바꾸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덕발달의 개념은 도덕성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²⁰⁾

120) 피터스에게 있어서 도덕발달의 인지적 측면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방식으로서 실천적 지식과 이해, 추론, 인식, 판단, 결정’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정의적 측면은 ‘세상에 대해 반응하는 양식으로서 감정, 정서, 감각, 정조, 기분, 태도’ 등을 포괄하고 있다. 한편 행동적 측면은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일상적인 행동으로 효율적으로 변환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격의 특성 유지와 형성에 있어서의 행위유발적 요소들, 의지, 노력, 유혹의 거부 그리고 습관처럼 안정적으로 선택된 행동유형들’을 포괄하고 있다. 박병기·추병환, 『윤리학과 도덕교육1』 (서울: 인간사랑,

또한 리코나(T. Lickona)는 도덕적 인간의 특성을 훌륭한 인격(good character)¹²¹⁾으로 보고, 이러한 인격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을 모두 통합하고 있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본다. 즉 ‘훌륭한 인격(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는 것(moral knowing), 도덕적인 감정, 그리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리코나는 ‘훌륭한 인격 형성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¹²²⁾

영역	선(善)의 측면	습관의 측면
도덕적 인지	선을 아는 것	사고의 습관
도덕적 감정	선을 바라는 것	심정의 습관
도덕적 행동	선을 행하는 것	행동의 습관

그래서 이러한 인격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 역시 “도덕적으로 아는 것, 도덕적으로 느끼는 것 또는 도덕적인 태도, 그리고 도덕적 행동과 같은 인간 인성(人性)의 세 가지 양상들을 교육시킨다는 것을 의미”¹²³⁾한다.¹²⁴⁾ 이렇듯 리코나는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을 통합하여 구조화함으로써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도덕교육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1996), p. 349.

121) 리코나는 도덕적 알기, 도덕적 느끼기, 도덕적 행동하기가 어우러질 때 그 결과로 좋은 인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병석, “인지·정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57집, 2009, pp. 254.

122) 고요한, “Lickona의 인격교육론에 대한 조직교육학적 재구성”, 『인격교육』, 제7권 2호, 2013, p. 19에 제시된 표이다.

123) 박병기·추병환, 『윤리학과 도덕교육1』 (서울: 인간사랑, 1996), p. 411(재인용).

124) 도덕적 인지란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지적인 판단작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인지, 즉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만으로 도덕적 행위를 담보할 수 없다. 이처럼 도덕적 지식이 반드시 도덕적 행동의 원천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동기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도덕적 감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감정은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선(善)에 대한 감정들을 통해 우리가 선한 행동을 욕구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도덕적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판단능력과 감정을 구체적인 도덕적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힘인 ‘의지’나, 선택의 순간에서 진실, 진심, 공정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행위 하도록 만드는 힘인 ‘습관’이 요구된다.

시사한다.

앞서서 제시한 피터스나 리코나의 이론이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정의(正義)’라는 개념을 도덕적 가치(덕목) 중의 하나로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이론들을 근거로 정의교육 역시 인지적·정서적·행동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의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의로운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다. 즉 정의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이 정의인 줄 알고,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을 지닐 수 있어야 하며, 정의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의(正義)교육은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정의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로움을 바라고 정의로운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실제로 정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의교육을 하는 방법에 있어 이러한 각각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각 접근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교육은 학생들이 인지적 접근을 통해 정의(正義)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정의(正義)’라는 개념 역시 단순히 기존의 정의 이론들을 습득하는 것에서 벗어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을 정의라고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사고하고 분석하고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현실의 부정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나 기준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정의 이론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무엇인지 스스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논의되어 온 정의에 관한 이론들을 학습하고 더 나아가 기존의 정의이론들을 재평가해봄으로써 정의이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인지적 과정을 통해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의교육은 정서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정의감(正義感)¹²⁵⁾을 함양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정의에 대한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정의로운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도덕적 감정이 제대로 발달된 사람만이 직면한 문제 사태에 대해 도덕적으로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다. 반면에 도덕적 감정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도덕적 행위나, 정의로운 행위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¹²⁶⁾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교육에서도 도덕성의 정서적 요소 함양을 위해 정의와 관련된 문제 사태에 대해 도덕적으로 민감하게 느끼고, 도덕적 감정을 표현하고, 모범에 비추어 자신을 반성하고, 일상생활에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하거나 실천의지를 단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정의교육은 행동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의(正義)의 실천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정의(正義)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앎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덕과에서는 이러한 ‘지행(知行)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정의’의 문제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동의 문제라는 점에서 행동적 접근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의(正義)에 대해서 알고 느끼는 바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결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교육을 통해 사고와 감정, 숙고와 행동, 이론과 실재를 통합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실현 시키려는 노력”¹²⁷⁾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학습지도 과정에서 그 가치 규범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 기능과

125) 우리말의 표현에 ‘정의감(正義感)’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정의가 단순히 이성의 원리가 아니고 감성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데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다. 김우창, 『정의와 정의의 조건』 (서울: 생각의 나무, 2008), p. 50-51.

126) 이범웅·김태훈·서강식, 『도덕과 교육의 실제』 (고양: 인간사랑, 2004), p. 31.

127) 랩슬리(D.K.Lapsley)·파워(F.C.Power), 정창우 옮김,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고양: 인간사랑, 2008), p. 548.

실천방법, 행위 양식을 지도”¹²⁸⁾할 수 있어야 하며, “교수·학습의 연장선상에서 일상의 여러 생활 장면으로 확대되어 반복적으로 실천”¹²⁹⁾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때 비로소 정의의 도덕성이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의 개선 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의교육을 통해 제시되는 정의의 내용들이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의론에서 제시하는 정의의 내용인 분배정의의 문제, 인정의 문제, 대표의 문제 등이 모두 정의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도록 정의의 영역 안에서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다음으로는 정의를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접근을 통해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세 측면이 조화롭게 균형 있는 방식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로움(正義)’으로 표현되는 도덕적 성향은 인지, 정서, 행동의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면적인 현상이므로 정의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인지적·정서적·행동적인 접근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¹³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128) 신병훈·박준화·김수형,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과 활용을 통한 도덕과 교수·학습의 통합적 접근 방안 연구”,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7, pp. 546.

129) 앞의 글, pp. 546.

130) 여기서 유의하여야 할 점은 논의의 편이상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접근을 각각 구분되는 영역으로 나누었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 명확히 인지와 정서와 행동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영역들은 서로 중첩되어 있기도 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등의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은 관계를 갖는다. 사실상 우리가 도덕적 문제 사태에 직면했을 경우에도, “지적인 면에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정서적인 면에서 볼 때,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이 갈등하는 경우, 감정이입이나 공감을 통해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행동적인 면에서 일탈의 유혹에 직면했을 경우,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송석재, 『반두라의 자기조절의 도덕교육』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6), p. 27.). 이처럼 이 세 접근은 분명히 구분되지만 또한 통합적인 모습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도덕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을 함에 있어서 역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 세 측면이 조화롭게 균형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와 관련된 논의들은 사회가 형성된 이래로 계속 존재해왔다. 물론 '정의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고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본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분출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의라는 개념은 결코 단순하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론적인 체계화 과정을 거쳐 많은 학자들이 정의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떠한 한 이론이 완벽하게 정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논의되어 온 정의이론들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양한 정의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표적인 논의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진영의 롤스와 왈쩌의 정의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로써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부정의를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응해 나가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이론은 우리 사회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화해 나가는 갈등 양상들을 제대로 진단하고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한다. 이에 본 논의에서는 부정의에 대한 고찰이 먼저 선행되었다. 여기에서는 부정의가 각각의 삶의 차원, 즉 경제적 영역, 문화적 영역, 정치적 영역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게 됨을 지적하고, 부정의를 불평등 분배의 문제, (정체성)무시의 문제, 대표 불능의 문제로 파악한다. 부정의가 이렇듯 다차원적인 모습으로 파악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부정의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도 통합적인 정의이론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합적 정의이론이 갖는 논의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의로운 사회는 경제적 영역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필요한 자원을 (재)분배((re)distribution)받을 수 있어야 하고, 문화적 영역에서 지위를 인정(recognition)받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정치적 영역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합당하게 대표(representation)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에 관한 담론들은 이러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다양한 요구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하며, 이에 따라 정의의 문제로 재분배, 인정, 대표의 문제를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3차원적 접근, 즉 통합적 접근을 통해 파악한 정의(正義)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의이론은 단지 추상적이거나 지극히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사회의 부정의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한다면, 이는 곧 우리가 정의에 대한 3차원적 접근을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의에서도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정의와 부정의의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정의에 대한 3차원적 접근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정의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실현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정의론에 관한 연구는 더 나아가서 도덕과 교육에서 정의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도덕과 교육에

서 정의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해 볼 수 있었다. 먼저 현재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은 ‘정의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정의론에 대해 따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단원이 없어 정의이론과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적었으며, 그마저도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만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물론 다른 단원에서 과편적으로나마 문화적 인정의 문제나 정치적 참여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었으나, 이렇게 다를 경우 그러한 문제들을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새로운 정의교육은 정의의 내용에 있어, 세 차원에서의 정의 문제들을 모두 포함하여 체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된 개념의 정의를 제시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의 정의교육에서는 특히 도덕적 사고와 판단능력을 중시하는 인지적 접근이 강조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정의교육이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정의이론들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인지적 접근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의교육은 학생들은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고,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을 지니고, 정의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도덕과에서의 정의교육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정의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의로움을 바라고 정의로운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실제로 정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교육 함에 있어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접근의 포괄적이고도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정의에 대한 고찰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정의(正義)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을 좌

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계속 논의해 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의에 대한 담론을 꾸준히 형성해 나가면서 추상적인 이론으로써 정의를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틀을 갖춘 정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의이론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기존의 정의이론들을 평가해보고 이를 재구성해봄으로써 더욱 구체화 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회를 도덕과 교육에서 ‘체계화 된 정의교육’을 통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 정의교육은 정의의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어야 할 것이며, 결코 정의이론에 대한 이론적 학습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될 것이다. 정서적이고 행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의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때 도덕과 교육에서의 정의교육이 비로소 의미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正義)를 교육하는 데 있어 도덕교육이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적 대안의 모색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요한, “Lickona의 인격교육론에 대한 조직교육학적 재구성”, 『인격교육』, 제7권, 2013.
- 김만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서울: 동명사, 2002.
- 김문조, 『한국사회의 양극화』, 파주: 집문당, 2008.
- 김봉석, “철학적 정의론의 다차원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8.
-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2007.
- 김우창, 『정의와 정의의 조건』, 서울: 생각의 나무, 2008.
- 김원식, “인정과 재분배”, 『사회와 철학』, 제17호, 2009.
- 김원식, “생활세계 식민화론의 재구성: 배제, 물화, 무시”, 『사회와 철학』, 제18호, 2009.
- 김원식, “지구화 시대의 정의(正義)”, 『철학탐구』, 제28집, 2010.
- 낸시 프레이저, 김원식 옮김, 『지구화 시대의 정의』, 서울: 그린비, 2010.
- 데이비드 흄, 이준호 옮김, 『도덕에 관하여』, 서울: 서광사, 1998.
- 랩슬리(D.K.Lapsley)·파워(F.C.Power), 정창우 옮김,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 고양: 인간사랑, 2008.
- 리처드 윌킨슨, 김홍수영 옮김, 『평등해야 건강하다』, 서울: 후마니타스, 2008.
- 마이클 왈쩌, 정원섭 외 옮김, 『정의와 다원적 평등』,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9.
- 문미희,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파주: 한국학

- 술정보, 2005.
- 박건, “낸시 프레이저: 재분배, 인정, 그리고 대표의 3차원 정의와 페미니즘 운동”, 『여성이론』, 제24호, 2011.
- 박병기·추병환, 『윤리학과 도덕교육1』, 서울: 인간사랑, 1996.
- 박정순, “공동체주의 정의관의 본질과 그 한계”, 『철학』, 제61집, 1999.
- 박정호·여진주 공저, 『사회문제론: 이론과 실제』, 서울: 신정, 2008.
- 박찬구, “흄과 칸트에 있어서의 도덕감”, 『철학』, 제44집, 1995.
- 박찬구 외 9인, 『윤리와 사상』, 서울: 천재교육, 2012.
- 박채용·정태일, “정치철학적 정의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7권, 2001.
- 방영준, 『공동체, 생명, 가치: 우리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 개미, 2011.
- 백미연, “재분배와 정체성을 넘어 참여의 평등(parity of participation)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2009.
- 송석재, 『반두라의 자기조절의 도덕교육』, 광주: 한국학술정보, 2006.
- 신동면 엮음,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서울: 풀빛, 2007.
- 신병훈·박준희·김수형,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과 활용을 통한 도덕과 교수·학습의 통합적 접근 방안 연구”,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 신춘호, “칸트 윤리학에 비추어 본 도덕과 교육의 성격”, 『도덕교육연구』, 제17권, 2005.
- 아리스토텔레스, 조대웅 편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돌출새김, 2008.
- 악셀 호네프,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서울: 동녘, 1996.
- 악셀 호네프, 문성훈·이현재·장은주·하주영 옮김, 『정의의 타자』, 광주: 나남,

2009.

알베르트 반두라 편저, 『자기효능감』, 서울: 학지사, 2004.

유병열, 『도덕교육론』, 파주: 양서원, 2004.

윤진숙,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의 다원적 정의론”, 『법학논총』, 제17집, 2007.

이문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 Honneth와 Fraser의 인정이론을 통해 본 현대 사회에서의 정의”,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2012.

이범웅·김태훈·서강식, 『도덕과 교육의 실제』, 고양: 인간사랑, 2004.

이병석, “인지·정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57집, 2009.

이상원, “존 롤즈의 정의론: 공정성으로서의 정의(I)”, 『신학지남』, 제66권, 1999.

이상환,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것의 차원”, 『사회와 철학』, 제12호, 2006.

이현우, “정치참여 유형으로서의 촛불집회: 대표성과 변화”,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이현재, “물화(物化)는 인정(認定)을 망각한 결과이다”, 『사회비평』, 제36권, 2007.

임의영,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적 심화를 위한 정의론의 비교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 2003.

임희섭·양종희,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 서울: 나남, 1998.

장미경,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제39집, 2005.

전태국,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의 내적 성숙의 모색”, 『한국사회학』, 제41집, 2007.

정재각, “한국사회의 양극화에 대한 논의: 사회정의 관점에서”, 『한·독 사회

- 과학논총』, 제16권, 2006.
- 정창우,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서울: 교육과학사, 2004.
- 조난심·윤현진·이명준·차우규, 『도덕교육학신문』, 서울: 문음사, 2003.
- 조현옥·김은희, “한국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과정 10년의 역사적 고찰”, 『동향과 전망』, 제79호, 2010.
- 존 롤즈, 황경식 옮김, 『정의론』, 서울: 이학사, 2003.
- 차미란, “도덕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지행합일”, 『도덕교육연구』, 제15권, 2004.
- 카렌 레마크, 이유선 옮김, 『정의에 대한 6가지 철학적 논쟁』, 서울: 간디서원, 2006.
- 한건수,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과주: 한울, 2004.
- 홍성우,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윤리학』, 서울: 선학사, 2005.
- 홍찬숙, “사회정의론에 대한 여성주의적 검토”, 『페미니즘연구』, 제8권, 2008.
- 황경식·박정순 외 12인,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9.
- Amanda Keddie, "Refugee education and justice issues of representation, redistribution and recognition",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42(2), 2012.
- Axel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Joel Anderson(trans.), Polity PRESS, 1996.
- _____, "Recognition and Moral Obligation", *Social Research*, 64(1), 1997.

- _____, "Recognition or Redistribution?: Changing Perspective on the Moral Order of Society", *Theory, Culture & Society*, 2001.
- _____, "Recognition and Justice: Outline of a Plural Theory of Justice", *Acta Sociologica*, 47(4), 2004.
- Ben Kotzee, "Educational Justice, Epistemic Justice, and Leveling Down", *Education Theory*, 63(4), 2013.
- Bina Fernandez, "Exploring the Relevance of Fraser's Ethical-Political Framework of Justice to the Analysis of Inequalities Faced by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Quality*, 1(2), 2011.
- Brian Orend, "Walzer's General Theory of Justice", *Social Theory and Practice*, 27(2), 2001.
- Christian Lazzeri,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Rethinking N. Fraser's Dualistic Model", *A Journal of Philosophy and Social Theory*, 10(3), 2009.
- Christopher F. Zurn, "Recognition, Redistribution, and Democracy: Dilemmas of Honneth's Critical Social Theory",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3(1), 2005.
-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Micheal Walzer, *Spheres of Justice*, New York: Basic Books, 1983.
- Nancy Fraser, "Recognition without Ethics", *Theory, Culture & Society*, 18(2-3), 2001.

_____, "Mapping the Feminist Imagination: From Redistribution to Recognition to Representation", *Constellations*, 12(3), 2005.

_____, "Who Counts? Dilemmas of Justice in a Postwestphalian World", *Antipode*, 41(1), 2009.

_____, *Scales of Jus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_____, "Injustice at Intersecting Scales: On 'Social Exclusion' and the 'Global Po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3(3), 2010.

_____ and Axel Honneth,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Verso, 2003.

Rauno Huttunen, "Critical Adult Education and the Political - Philosophical Debate Between 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Educational Theory*, 57(4), 2007.

Richard W. Miller, "Rawls and Global Justice: A Dispute over A Kantian Legacy", *The Philosophical Forum*, 2012.

ABSTRACT

The Study on the Justice with Integrative Approach

Kim, Narae

Department of Ethics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oday's society, justice is referred to as a problem of determining what is justified when it comes to distributing commodities and goods. For example, Rawls and Walzer, who only focus their theories of justice in terms of distribution of goods, they have not been fully observing the problems of "recognition" and "representative." At this juncture, this study proposes 'justice in three-dimensional approach' as a new theory of justice in which we desperately need in this generation. It must be understood that this kind of three-dimensional approach must encompass not only 'redistribution' in economic perspective, but also a problem of 'recognition' in cultural perspective as well as a problem of 'representative' in political perspective. Ultimately, it is necessary for the concept of justice to be redefined with multi-dimensional approach.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a

new course of direction for teaching ethics and moral studies. To elaborate, basic ethics education needs to include all three problems of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representatives. In addition, ethics education needs to emphasize affective characteristics, recognizable and behavioral approaches in order for educators to practically teach justice to their students. With this type of integrated approaches in teaching justice, it will be possible for the program to actually raise 'a person with justice'. Lastly, the concept of justice must display not just as an abstract theory, but a theory where it can actually help a person to apply justice in his or her real life. Furthermore, in order to teach justice, moral education needs to provide more specific methods, as well as practical alternatives.